



주간통일정세 2012-12(2012.03.12~03.18) 발행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주소 서울시 강북구 한천로 1307(수유동) 통일연구원 (우) 142-728
전화 02) 900-4300 전송 02) 901-2547
E-mail webmaster@kinu.or.kr http://www.kinu.or.kr

주간 통일정세

2012-12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2. 대외정세 3. 대남정세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가. 정치

- **北 기계공업상 교체…리종국 임명(3/12, 노동신문)**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11일자에 따르면 리종국 신임 기계공업상은 지난 9일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열린 '2011년 사회주의경쟁순회우승기 수여식'에 기계공업상 직함으로 최룡해 당비서, 조병주 내각 부총리 등과 함께 참석함.
 - 리 기계공업상은 1999년 12월 기계공업성의 전신인 금속기계공업성의 전기기계공업관리국 국장으로 임명된 뒤 2003년과 2009년 연이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에 당선된 인물임.

- **北 김정은, 黨에 불순분자 색출 처리 지시(3/14, 마이니치신문)**
 - 북한의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노동당 간부들에게 불순분자를 색출해 숙청하도록 지시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14일 보도함.
 - 이 신문은 자체 입수한 북한 내부 문서를 인용해 김정은이 인민군 최고사령관에 임명된 다음날인 작년 12월 31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간부들에게 이렇게 지시했다고 전함.
 - 김정은은 "인민의 생활을 향상시키는 것"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지목하고 "식량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긴박한 문제"라고 말했으며 "정말 위험한 것은 뱃속에 칼을 품고 때를 기다리는 극소수의 불순분자"라면서 "인민 안보 담당자나 사법 검찰 부문의 활동가들은 뱃속에 칼을 품은 자들만을 색출해 처리해야 한다"고 지시함.

- **김정은, 당군정 핵심간부 총동원 對南 무력시위(3/15,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북한 김정은이 인민군 육해공 합동타격훈련을 참관했다고 15일 보도
 - 김정은의 명령으로 시작된 훈련은 비행대와 해군 함정, 포부대의 연합작전으로 진행됐음.
 - 노동신문은 "실전을 방불케 하는 훈련은 당장에라도 명령만 내리면 즉시 강력한 타격으로 역적패당이 다시는 우리의 최고 존엄을 모독하고 우리의 존엄 높은 체제를 헐뜯지 못하도록 원수의 본거지를 흔적도 없이 쓸어버릴 인민군 장병의 비상한 각오와 전투정신을 잘 보여줬다"고 전했다.
 - 이날 참관은 리영호 총참모장,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김정각 총정치국 1부국장, 김명국 총참모부 작전국장, 김원홍 총정치국 조직부국장, 박



재경 총정치국 선전부국장, 정명도 해군사령관, 리병철 공군사령관, 김영철 정찰총국장이 함께 했으며, 또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 김경희 당 경공업부장, 김기남, 최태복 당 비서, 강석주 내각 부총리, 박도춘, 최룡해, 김영일, 김양건, 태종수, 김평해, 문경덕 당 비서, 주규창 당 기계 공업부장, 우동측 국가안전보위부장, 김창섭 국가안전보위부 정치국장 등이 동행했음.

■ 김정은 동향

- 3/15 김정은 부위원장, 조선인민군 육해공군 합동타격훈련 지도 (3.15,중통·중·평방)
 - 리영호(軍총참모장/영접보고) · 김영춘(인민무력부장) · 김정각(軍총정치국 제1부국장) · 김명국 · 김원홍(대장) 영접
 - 박재경 · 정명도 · 리병철 · 김영철(대장)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작전지휘성원들과 조선인민군 대연합부대 지휘성원들 현지 대기
 - 김기남 · 최태복 · 김경희 · 강석주 · 장성택 · 박도춘 · 최룡해 · 김영일 · 김양건 · 태종수 · 김평해 · 문경덕 · 주규창 · 우동측 · 김창섭 · 당과 국가 · 무력기관 책임일꾼 · 도당책임비서 · 평양시안의 당중앙지도기관 성원 · 성 · 중앙기관 일꾼 등 참관
- 3/15 김정은 부위원장, 숲 위원장 사망 당시 '유훈관철을 통한 사회주의 강성국가를 일떠세워야 한다는 입장을 뚜렷이 밝혀주었다'면서 유훈관철을 강조(3.15,조선신보/유훈관철, 한치의 양보도 드팀도 없이)



■ 기타 (대내 정치)

- '당대표자회'(4월 중순) 관련 '김정은을 수반으로 당두리에 대동단결하여 사회주의 강성부흥을 위한 대진군을 힘차게 벌리자'고 호소(3.14, 중통·민주조선/조선노동당 대표자회를 대진군의 자랑찬 성과로 맞이하자)
-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대변인 담화(3.16)】 '광명성-3호'를 '4.12~16일 사이 平北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발사 예정' 보도(3.16, 중통·중방)
- 최영림 내각총리, 3.15 黃南 농촌경리부문사업 및 무산광산연합기업소 현지시찰(3.16, 중통)
- [조선중앙통신사 보도(3.17)] '광명성-3호' 발사준비 일환으로 '국제민용항공기구와 국제해사기구 등에 필요한 자료 통보'(3.17, 중통·중·평방)
- '광명성-3호' 발사예고 발표(3.16)는 '김정은의 유훈관철 의지에 따른 대내외정책 구현'이라며 "실사 미국이 반대한다고 해도 '광명성-3호' 발사 계획은 변경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3.17, 조선신보/100돌 태양절에 즈음한 실용위성 발사)
- 최영림 총리, 3.15 부령합금철공장 및 고무산시멘트공장 시찰(3.17, 중통·중·평방)
- 최영림 총리, 3.16 김책제철연합기업소 현지시찰(3.18, 중통)
- [조선중앙통신사 논평] '위성발사는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것으로 주권국가의 자주권에 속하는 문제'라고 주장(3.18, 중통·평방/광명성-3호 발사는 공화국의 정정당당한 합법적 권리이다)

나. 경제

- **美 1월 대북수출 486만 달러...대부분 구호용(3/13, 미국의소리(VOA))**
 - 올해 1월 북미 간 교역액이 486만4천 달러로 집계됐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무역통계 자료를 인용해 13일 보도함.
 - 이는 지난해 전체 북미 교역액 940만 달러의 절반을 넘는 수치이며 수출입별로 보면 북한의 대미수출은 전혀 없고 모두 미국이 북한에 수출한 것임.
- **'활기던 평양 이면엔 시장경제 확산(3/14, CNN)**
 - 북한을 왕래하는 외부 인사들의 눈에 비친 평양은 최근 경제 사정이 빠르게 나아지면서 도시의 면모가 완전히 변했다고 CNN이 미국 비영리매체 글로벌메일을 인용해 13일(현지시간) 전함.
 - 몇 년 전만 해도 텅텅 비어 있던 상가에는 온갖 제품이 수북하고 상점도 늘고 있으며 레스토랑과 커피숍은 인파로 북적거리고, 한산하던 도로는 차량으로 가득하고 완공을 못해 장기간 방치된 105층짜리 류경호텔은



이집트 통신사업자 오라스콤의 지원으로 완공을 앞두고 있음.

- **김정은 등장 후 기술자들 해외연수 기회 늘었다(3/15,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 관료들이 최근 신기술과 지식 습득을 위해 중국을 포함한 각지의 해외 연수에 참여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 방송이 15일 전했다.
 - 이 방송은 북한의 기술 참관단이 최근 중국 산시성의 한 석탄화학 관련 공장을 찾아 관련 시설을 둘러보고 공장 관계자를 면담했다고 이날 전했다.
 - 북한은 정기적으로 상가폴 등지에서 지원 단체와 결연을 맺고 기술 습득 작업을 벌여왔는데 최근 이러한 행보가 더욱 가속화 되는 것으로 보임.

- **북·러 "북한 경유 가스관사업 협력강화"(3/16, 연합뉴스)**
 - 리용호 부상은 14일(현지시간) 모스크바에서 러시아 외교부의 안드레이 데니소프 제1차관과 회담을 갖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러시아 외교부는 회담이 끝난 뒤 발표한 성명을 통해 "양국 차관은 한반도의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관해 서로 의견을 교환했다"면서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양국이 긴밀히 협력키로 했다"고 발표함.

- **北 전역에 돼지목장 건설 바람(3/16, 좋은벗들)**
 - 북한 전역에서 돼지목장 건설 바람이 불고 있다고 대북인권단체 (사)좋은벗들이 15일 전함.
 - 이 단체가 운영하는 북한연구소는 소식지 '오늘의 북한소식'(446호)에서 북한의 각 시·군이 주민의 먹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돼지목장 건설에 필요한 자재와 설비 마련에 몰두하고 있다고 밝힘.

다. 군사

- **北 당·군수뇌부 대거 판문점 방문(3/13, 연합뉴스)**
 - 군의 한 소식통이 14일 "김정은이 지난 3일 판문점을 시찰한 뒤 사흘간 당·군 수뇌부 130여명이 집중적으로 판문점의 통일각 등을 방문했다"면서 "최근에는 중간 간부들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힌 것을 연합뉴스가 전함.
 - 리영호 북한군 총참모장과 김영춘 인민무력부장은 지난 4일 판문점을 시찰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정은 부위원장이 판문점을 다녀간 이후 최근에는 유조차량과 부식물을 공급하는 차량 등이 잇따라 목격되고 있어 시찰에 따른 후속 조치 차원으로 보인다고 소식통은 전함.

- **北, 4월 '광명성 3호 위성(장거리로켓)' 발사(3/16,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김일성 주석의 100회 생일(4월15일)을 맞아 '광명성 3호 위성(장



거리 로켓'을 발사할 계획이라고 조선중앙통신이 16일 보도함.

-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담화를 통해 "김 주석 생일을 맞으며 자체의 힘과 기술로 제작한 실용위성을 쏘아올리게 된다"며 "이번에 쏘아올리는 '광명성 3호'는 극궤도를 따라 도는 지구관측 위성으로, 운반로켓 '은하 3호'는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 위성발사장에서 남쪽 방향으로 4월12일부터 16일 사이에 발사된다"고 밝힘.
- 대변인은 "위성발사 과정에서 산생되는 운반로켓 잔해물들이 주변 국가들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비행궤도를 안전하게 설정했다"며 "우리는 평화적인 과학기술 위성발사와 관련해 해당한 국제적 규정과 관례들을 원만히 지킬 것이며 투명성을 최대도 보장할 것"이라고 말함.

● **北 '광명성3호 발사는 주권국 합법적 권리'(3/18, 연합뉴스)**

- 북한은 18일 '광명성 3호' 발사가 우주공간의 평화적 개발 및 이용과 관련해 국제적으로 공인된 주권국가의 합법적 권리라고 밝혔음.
-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광명성 3호' 발사 계획과 관련해 한국, 미국, 일본 등 관련국의 우려와 비난에 대해 논평을 통해 "반공화국 압살정책의 전형적인 발로로서 우리의 평화적 우주이용 권리를 부정하고 자주권을 침해하려는 비열한 행위"라며 "과학연구와 경제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위성발사는 특정 국가의 독점물이 아니다"고 주장했음.

● **北 '광명성 3호' 국제비난에 공세적 대응(3/18, 연합뉴스)**

- 북한이 장거리 로켓인 '광명성 3호 위성' 발사 계획을 전격 발표한 이후 국제사회의 우려와 비난이 쏟아지고 있지만 발사 방침을 굳히고 있고, 국제사회의 비난에는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위성 발사'라고 되받아치면서 '발사현장 공개' 카드까지 꺼내는 등 공세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 대내적으로는 '광명성 3호' 발사를 '강성번영을 추동하는 쾌거'라고 띄우며 주민들에게 '강성대국' 진입의 상징으로 대대적인 선전을 하고 있으며, '광명성 3호'가 '미사일 위협' '유엔결의 위반'이라는 미국과 국제사회의 비난에 북한은 주권국가의 평화적 목적의 '실용위성' 발사를 비난하는 것은 대북적대정책의 연장이라고 반격했음.
- 조선중앙통신은 18일 논평을 통해 "'광명성 3호'는 평화적 우주개발과 이용정책에 따라 우리 과학자, 기술자들이 나라의 경제발전에 필수적인 실용위성들을 개발이용하기 위해 진행한 과학연구사업의 고귀한 결정체"라며 "우리는 국제적 규정과 절차에 따라 국제기구들에 필요한 자료들을 통보했으며 다른 나라들의 전문가와 기자들을 발사현장에 초청하려는 의사도 표시했다"고 밝혔음.



- 기타 (대내 군사)
 - 육군 제1사단이 3.13~15일까지 파주 일대에서 지상협동훈련 실시 (연합뉴스 인용) 공표 관련 "대결과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고 주장(3.12,중통·중방)
 - 해군 2함대 방문 정승조 합참의장의 對北발언(절호의 기회, 복수, 백배 천배 응징 등)에 대해 "대결에 환장한 날강도적인 궤변"이라고 강력 비난(3.15,중통·노동신문·평방/절호의 기회는 자멸의 기회/우리민족끼리/괴뢰호전광의 분별없는 광기)

라. 사회·문화

- "북한TV 맞아?"...뉴스보도 봄맞이 새단장(3/13, 조선중앙TV; 연합뉴스)
 - 북한 조선중앙TV가 봄을 맞아 뉴스 영상에 다양한 그래픽을 접목하고 젊은 여성 아나운서들이 자주 뉴스를 진행하는 등 메인뉴스 보도에 눈에 띄는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연합뉴스가 최근 중앙TV의 뉴스 화면을 분석한 결과 오후 8시 메인뉴스 배경화면이 지난 10일부터 갈색에서 하늘색으로 바뀌었으며 기존 배경화면이 다소 건조하고 우중충한 분위기였다면 새 배경화면은 밝은 분위기를 자아냄.
 - 특히 봄의 길목에 30세 전후로 보이는 젊은 여성 아나운서들이 오후 8시 메인뉴스 앵커로 자주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 눈길을 끌며 종전에는 40대 이상으로 추정되는 여성, 남성 아나운서가 이 시간대 뉴스를 주로 진행했으며 뉴스를 진행하는 아나운서 왼쪽으로 사진이나 동영상을 담은 작은 박스화면도 자주 등장함.
- 서유럽 최초 北식당 '해당화' 홈페이지 개설(3/13, 연합뉴스)
 - 지난달 네덜란드에 북한식당을 개설해 관심을 끈 조선평양해당화식품회사 사가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도 개설한 것으로 13일 연합뉴스가 확인함.
 - 연합뉴스가 북한 홍보사이트인 '내나라' 홈페이지에 올라온 각종 광고배너를 확인한 결과 '평양해당화식품' 배너가 최근 추가됐으며 이 배너를 클릭하면 평양해당화식품회사 홈페이지가 뜬.
- 공훈국가합창단 서해 군부대 공연(3/13, 노동신문)
 - 공훈국가합창단이 지난 10일 서해 초도방어대와 인민군 해군 제123군부대에서 공연을 시작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13일 전함.
- 北산림 매년 평양 면적 사라져(3/14, 연합뉴스)
 - FAO가 최근 발표한 '2011 세계 산림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북한의 산림 면적은 전체 국토의 47%인 566만 ha로 1990년 820만 ha에 비해 30.9% 줄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조선요리협회 홈페이지 개설(3/14, 조선중앙통신)**
 - 조선요리협회가 요리에 대한 상식과 이론, 기술 등을 소개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조선요리'를 개설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4일 보도함.
 - 조선중앙통신은 홈페이지 가입자들이 전자게시판과 전자우편으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며 "조선요리협회 관계자에 의하면 이 홈페이지는 요리 전문가와 가정주부들의 친근한 길동무가 되고 있다"고 소개함.

- **北휴대폰업체 '고려링크' 모회사 변경(3/15,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과 이집트의 합작 휴대전화 업체인 '고려링크'의 모회사가 올해부터 '오라스콤 텔레콤 홀딩(OTH)'에서 '오라스콤 텔레콤 미디어&테크놀러지(OTMT)'로 바뀌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5일 전함.
 - OTMT 마날 하미드 대변인은 "(고려링크의) 모회사만 달라졌을 뿐 바뀐 것은 없다"며 "지분도 변함없이 오라스콤 측이 75%, 고려링크가 25%를 보유하게 된다"고 말함.

- **北관현악단, 정명훈 지휘로 파리서 감동의 무대(3/15, 연합뉴스)**
 - 북한의 20대 젊은이들로 구성된 은하수 관현악단이 정명훈 서울시향 예술감독의 지휘와 함께 예술의 도시 프랑스 파리에서 프랑스 교향악단과 어울려 멋진 공연을 펼쳤다고 연합뉴스가 15일 전함.

- **北, 김일성 100회 생일에 교복선물 계획(3/16,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 당국이 올해 김일성 주석 100회 생일(4월15일)을 전후로 대학생을 포함한 전역의 학생에게 교복을 선물할 계획이라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6일 보도함.
 - 양강도 소식통은 이 방송에 "혜산 옷 공장과 양복점들이 만기동(완전가동) 하고 있다"며 "4·15 선물교복 생산을 위해 여맹(여성동맹)에서도 재봉질하는 여성들을 따로 뽑아 동원하고 있다"고 전함.
 - 함경북도 소식통도 "4월15일을 맞으며 유치원생부터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교복을 선물한다"며 "이번 선물교복은 중국에서 비싼 천을 들여와 만드는 것으로 알려져 학생과 학부모들의 기대가 높다"고 전함.

- **조선중앙통신-AP 공동사진전 뉴욕서 개막(3/17,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 조선중앙통신사와 미국 AP통신사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사진전이 16일 미국 뉴욕에서 개막했다고 미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7일 전했음.
 - 작년 6월 조선중앙통신사와 AP통신 사이에 체결된 MOU(양해각서)에 따라 열린 이번 공동사진전은 '북한의 창'이란 주제로 다음달 13일(현지 시간)까지 계속됨.
 - 이번 사진전이 열리는 뉴욕시의 'The 8th Floor' 갤러리에는 두 통신사가 그동안 찍은 북한 주민의 일상, 북한 지도부의 현장시찰 모습, 자연경관, 도시 전경 등 북한 관련 사진 79점이 전시됐음.



● 라디오프랑스가 한국을 통일시켰다(3/18, 르몽드)

- 프랑스의 유력 일간지 르 몽드는 17일(현지시간) 정명훈 서울시향 예술감독의 지휘로 북한과 프랑스의 관현악단이 합동 연주회를 한 것과 관련, "라디오프랑스가 한국을 통일시켰다"고 평했음.
- 르 몽드는 이날 주말판 기사에서 "라디오프랑스의 초청으로 프랑스에 온 북한 은하수 관현악단과 라디오프랑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합동 공연을 한 것은 남과 북으로 갈라진 한국인들을 함께 모이게 하려는 정감독의 오랜 노력이 결실을 본 것"이라며 이렇게 전했다.

■ 기타 (대내 사회·문화)

- 北, 지난 17년간 금수산태양궁전 지구에 230여종의 56만여 그루의 나무와 꽃관목, 꽃뿌리를 식수했다고 선전(3.12,중방)
- 대규모 살림집 건설 관련 약 7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工期 단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보도(3.13,중방)
- 평양 시내 모든 구역·군들에 '고기상점' 신설 및 무산광산연합기업소의 새로운 '선광(線纜) 계통' 설치 보도(3.14,중·평방)
- 北, 3·4월 위생월간에 즈음하여 생산·생활문화를 확립 사업 진행(3.15,중통)
- 조선중앙통신사-美 AP통신사 공동주최 사진전시회, 3.15 뉴욕 루빈미술관에서 개막 및 축하연회 진행(3.16,중통)
- 은하수관현악단의 프랑스 공연(3.14)은 '평양과 파리, 유럽과 동방의 문화가 음악으로 하나가 된 사변적 합동연주회로, 21세기 조선의 문명을 높은 연주실력으로 보여준 감동의 무대였다'고 관평 게재(3.16,노동신문)

2. 대외정세

가. 일반

● 美대북인권특사, 탈북자논의 유엔회의 참석(종합)(3/12, 연합뉴스)

-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오는 12~13일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인권이사회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10일(현지시간) 국무부가 밝혔다.
- 킹 특사는 유엔인권이사회에 북한문제 논의를 위한 19차 회의에 참석하며,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도 만나 북한 내 인권상황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 日경찰 "평양정보센터에도 일제컴퓨터 불법수출"(3/12, 아사히신문)

- 북한에 일본제 중고 컴퓨터 수천대를 불법 수출한 혐의로 구속된 재일 동포 사업가가 대량과괴무기 개발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기관에도 컴퓨터 1천여대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고 아사히신문이 12일 보



- 도함.
- 보도에 따르면 일본 경찰은 외환관리법 위반(무허가 수출) 혐의로 구속된 중고 컴퓨터판매사 사장 이모(49)씨가 2009년 봄부터 평양정보센터(PIC)의 수입 판매 담당자로 일했고, 이 기관에 1천800대 이상의 컴퓨터와 모니터를 무허가 수출한 것으로 보고 있음.
- **日, 북한과 북송 일본인 처 귀국 협의(3/15, 산케이신문)**
 - 일본의 산케이 신문이 이 신문은 북수의 정부 고위관계자를 인용해 민주당 중의원인 나카이 히로시(中井洽) 전 공안위원장이 이번 주말 북한 측과 1950~1980년대 재일동포와 함께 북한으로 건너간 이른바 '북송 일본인 처'의 귀국 문제를 협의한다고 15일에 전함.
 - **佛하원서 북한 세미나...탈북자 문제 등 논의(3/16, 연합뉴스)**
 - 프랑스 하원은 15일 오후(현지시간) 집권당 대중운동연합(UMP) 소속 앙리 플라놀 하원의원 주최로 북한 관련 세미나를 열어 탈북자 북송 문제 등 북한 현안을 논의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북한 은하수 관현악단과 라디오프랑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정명훈 서울시향 예술감독의 지휘로 역사적인 합동연주회를 개최한 지 하루 만에 열린 이 세미나는 지난 1월 하원 외교위원회 주최로 열린 북한정세 청문회의 후속행사로 기획됐으며, 프랑스 정·관계와 학계 인사 등 50여명이 참석했음.
 - **日 언론 "北 위성 발사는 미사일 실험"(3/16, 연합뉴스; 교도통신)**
 - 북한이 16일 인공위성을 탑재한 로켓을 다음달 발사하겠다고 발표하자 일본이 민감하게 반응했다고 전함.
 - 교도통신 등 현지 언론에 의하면 일본 방위성과 외무성은 북한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의 위성 발사 계획 발표 직후 일제히 정보 수집 등 경위 파악에 나섰다.
 - **美, '광명성 3호' 발사 계획 "매우 도발적" (종합)(3/16, 연합뉴스)**
 - 미국은 16일 북한이 다음달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겠다고 발표한데 대해 "매우 도발적인 계획"이라고 비난
 - 미 국무부의 빅토리아 눌런드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이러한 미사일 발사는 지역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것이며 또한 북한이 최근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삼가하겠다고 다짐한 것과는 모순된 태도"라고 말했다.
 - 눌런드 대변인은 "유엔 결의 1718호와 1874호는 분명하고도 명백하게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로 활용할 수 있는 발사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러 외무부, 北 로켓 발사 계획에 '심각한 우려'(3/17, 연합뉴스)**
 - 러시아 외무부는 16일(현지시간) 북한이 다음 달 인공위성을 탑재한 로



- 켓을 발사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것에 대해 우려한다고 밝혔음.
- 외무부는 홈페이지에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의 위성 발사 계획 발표는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는 것"이라며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음.
- **美 "北 로켓발사時 식량지원 어렵다"(종합2보)(3/17, 연합뉴스)**
 - 미국 정부는 16일(현지시간)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계획과 관련, "이를 강행하면 식량을 지원하는 일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밝혔음.
 - 빅토리아 눌런드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로켓 발사는 북한의 신의를 의심하게 만들고, 식량 선적을 추진할 우호적인 분위기 조성을 해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 눌런드 대변인은 북측의 이날 발표가 지난달 29일 중국 베이징(北京) 고위급 회담 합의사안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초래했다고 말했음.
 - **潘총장, 북한 로켓발사 계획 취소 촉구(종합)(3/17, 연합뉴스)**
 -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16일(현지시간) 북한에 대해 장거리 미사일 발사 계획을 취소할 것을 촉구
 - 예정대로 다음달에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위배하는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음.
 - 반 총장은 이날 마틴 네시르키 대변인을 통해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자제하겠다는 최근의 약속을 지키는 차원에서 위성발사 계획을 재고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음.
 - **日, 북한 발사 위성 日 항할때 요격 검토(3/17, 요미우리 신문)**
 - 일본 정부가 북한이 다음 달 발사하는 인공위성이 일본을 항할 경우 미사일방어(MD) 시스템으로 요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17일 보도
 - 이 신문에 의하면 일본 정부는 북한의 위성을 MD 시스템으로 요격하기 위해 자위대법에 근거한 '파괴조치명령'을 발령하는 방향으로 검토에 들어갔음.
 - **EU, '광명성 3호' 발사 발표에 "깊이 우려"(3/18, 연합뉴스)**
 - 캐서린 애슈턴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가 북한의 '광명성 3호' 발표 계획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계획을 포기할 것을 촉구
 - 애슈턴 대표는 17일(현지 시간) 발표한 성명서에서 "이번 발사계획은 국제적 의무와 정반대되는 것이며, 특히 유엔(UN)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안(1874호)에 어긋난다"고 지적
 - **'광명성3' 놓고 北-국제사회 '불꽃 공방전'(3/18, 연합뉴스)**
 - 북한의 장거리 로켓인 '광명성 3호 위성' 발사 계획을 둘러싼 외교적 공방이 본격화될 전망이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북한의 이번 발사계획이 발표되자마자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미사일 위협' '유엔결의 위반'이라며 계획 취소를 촉구했고, 중국조차도 이례적으로 북한 대사를 초치해 '우려'를 표명했음.
- 빅토리아 놀런드 미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북한이 발사를 강행한다면 식량지원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밝혔음.
- 중국의 외교부 장즈권(張志軍) 부부장도 지난 16일 지재룡 주중 북한대사를 불러 "중국은 북한의 위성계획과 국제사회의 반응에 주의하고 있다"고 이례적으로 우려의 입장을 전달했음.

● 北, 日에 "북송 일본인 처 문제 우선 협의하자"(3/18, NHK방송; 교도통신)

- 북한이 일본에 피랍자 문제를 유보하고 북송 일본인 처 문제를 우선 협의하자고 제안
- 18일 NHK방송과 교도통신에 의하면 북한의 송일호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담당 대사는 17일 몽골의 울란바토르에서 일본 측 관계자와 접촉한 뒤 기자회견에서 이런 견해를 밝혔음.
- 그는 일본이 강력하게 해결을 요구하는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자 문제와 관련 "일본 측에서 해결을 외치는 사람 중에는 이 문제를 전면에 내세워 북일 관계를 악화시키려는 사람이 있다"고 주장했다.

● 北 6자회담 대표 리용호, 中방문(3/18, 연합뉴스)

- 북한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리용호 외교부 부상이 17일 베이징을 방문했음.
- 지난 7-9일 미국 시라큐스대학교 행정대학원인 맥스웰스쿨과 독일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이 공동주최하는 한반도 세미나 참석차 미국을 방문했던 리용호 부상은 귀국하는 길에 러시아에 이어 이날 중국을 찾았다고 베이징 외교 소식통이 전했다.
- 리용호 부상은 중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한반도사무 특별대표 등을 만나 6자회담 재개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 기타 (대외 일반)

- 제일동포사업가의 컴퓨터 대북 불법수출 혐의로 日공안당국이 총련 산하 기관들을 압수 수색한 것은 '공화국의 권위를 훼손시키고 총련을 말살하려는 강패행위'라고 비난(3.12, 중통·노동신문·중방/불법무도한 강패행위)
- '조-러 경제적 및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 체결(3.17) 63주년 즈음 "전통적인 조로친선은 뿌리 깊으며 두 나라 인민들의 공동의 노력에 의해 더욱 강화발전 될 것" 강조(3.17, 중통·노동신문·중방/날로 두터워지는 조-로친선)



나. 6자회담(북핵)

● 北, 美에 연락사무소 설치 제안(日紙)(3/12, 요미우리신문)

- 북한이 최근 미국 측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하자고 요구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12일 '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함.
- 보도에 따르면 북한의 리용호 외무성 부상은 지난 10일 뉴욕에서 열린 비공개 세미나에서 "올해 안에 양국 수도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하길 바란다. 이걸 최상부(김정은을 지칭)의 뜻이다"라고 말했으며 또 지난달 북미 양국이 합의한 우리농 농축 활동 정지 등과 관련해 국제원자력기구(IAEA) 요원들이 "조만간 (북한에) 입국할 것"이라며 이달 말이나 내달 초에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갈 것이고, 또 5월이나 6월에는 북한의 국립교향악단이나 태권도 대표단이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리용호 北 "핵사찰 가까운 시일 내 이뤄질 것"(3/12, 연합뉴스)

- 미국 뉴욕을 방문중인 북한의 리용호 외무성 부상은 12일(현지시간) 북한 핵시설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이 가까운 시일 내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6자회담 북한측 대표인 리 부상은 이날 뉴욕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기 앞서 숙소인 밀레니엄 플라자 앞에서 잠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으며 리 부상은 IAEA 사찰 시기가 언제쯤 될지를 묻는 질문에 "가까운 앞날에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2월 있는 조미(북미)간의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이 계속 취해지고 있다"고 답함.

3. 대남정세

● 北, 모니터링 조건 남측 인도지원 거부방침(3/12, 연합뉴스)

- 최근 북한 측과 접촉한 대북지원단체 관계자는 12일 "북측 관계자가 순수한 인도적 지원만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며 "북측 관계자가 '순수한'이라는 표현을 매우 강조했다"고 밝힌 것을 연합뉴스가 전함.
- 다른 단체 간부는 "북한이 올해 분배감시라는 꼬리표가 붙은 남측 민간의 지원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안다"고 전함.

● 임태희, 베이징 다시 방문...北접촉 시도설(3/12, 연합뉴스)

-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이 이들 일정으로 베이징(北京)을 방문했다가 12일 귀국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연합뉴스가 밝힘.
- 베이징의 한 소식통은 이날 "임 전 실장의 베이징 방문은 확인됐지만 그의 베이징 일정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으며, 실장 측근은 "대한배구협회장으로서) 중국 측과의 관계 유지 차원에서 방중한 것"이라고 설명함.



- 유엔 인권이사회서 국회대표단-北대사 충돌(종합)(3/12, 연합뉴스)

 -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유엔 인권이사회(UNHRC) 회의장에서 12일(이하 현지시간) 탈북자 북송저지 운동을 위해 참석한 국회대표단과 주제네바 북한대표부 대사 사이에 충돌이 빚어짐.
 - 충돌은 이날 오전 스위스 제네바 유엔 유럽본부 인권이사회 회의실에서 마르주키 다르스만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이 북한 인권 실태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어 서세평 북한대사가 짙막한 입장을 발표한 뒤 회의를 떠나는 과정에서 발생함.
 - 다르스만 특별보고관은 탈북자 안전과 보호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의사에 반하는 강제송환 금지 원칙이 준수돼야 한다고 촉구했고, 서세평 대사는 "특별보고관의 보고는 조작된 정치적 책동에 불과하다"고 주장함.

- 北외무성, 南 '탈북자 국제쟁점화' 비난(3/13, 조선중앙통신)

 -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와 문답을 통해 "요즘 이명박 역적패당이 그 무슨 '탈북자' 문제라는 것을 갖고 여기저기 돌아치며 소란을 피우면서 유엔 인권이사회를 비롯한 국제무대에까지 끌고가 동족대결을 국제화해보려는 어리석은 놀음을 벌이고 있다"고 맹비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대변인은 이어 "천만군민이 영도자의 두리(주변)에 일심단결해 광명한 미래를 향해 힘차게 전진해나가는 우리 현실 앞에 저들이 것처럼 고아대던(떠들던) '급변사태'와 '불안정설'이 모두 풍지(풍비)박산나게 되자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격으로 마지막 몸부림을 치는 것"이라고 주장함.

- 北,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비난 강화(3/14, 노동신문; 우리민족끼리)

 - 북한 노동당기관지인 노동신문은 14일 "얼마 전까지 괴뢰들은 이 회의에서 '북핵문제'를 정식으로 논의하는 것은 아니라고 발뺌해왔다. 그러던 자들이 드디어 정체를 드러내고 '북핵문제'니 '핵포기'니 하고 떠들고 있다"며 "우리를 모해하기 위한 마당으로 만들려 한다"고 비난함.
 - 대남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도 이날 논평에서 "김성환이 '핵안전수뇌자회의'에서 '북핵문제가 다뤄질 수 있다'며 나발을 불어댔다"며 "역적패당이 떠든다고 스스로 핵을 포기할 우리가 아니며 남조선에 핵무기가 남아있고 우리를 반대하는 핵전쟁연습이 계속되는 한 우리의 핵억제력은 백배로 강화될 것"이라고 주장함.

- 北 '제네바 충돌' 국회대표단 맹비난(3/14, 우리민족끼리)

 - 북한의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14일 탈북자 강제송환저지를 위해 제네바 유엔 유럽본부 인권이사회 회의장에서 북측 외교관들과 충돌한 우리 국회 대표단을 맹비난함.
 -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망신덩어리'라는 제목의 글에서 "12일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장에서 괴뢰 국회 대표단의 패쪽을 달고 초청하지도 않은 회의



에 얼굴을 들이밀고 동족대결의 난동을 부리던 새누리당과 자유선진당 패거리들이 해당기구 경비성원들에 의해 저지, 감금당했다"고 전함.

● **남북관계 악화에도 1~2월 남북교역 36%↑(3/16, 연합뉴스)**

- 5·24 대북제재 조치 속에서도 올해 1~2월 남북교역 규모가 눈에 띄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에 연합뉴스가 전함.
- 16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2월 남북교역액은 3억2천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의 2억3천500만 달러보다 36%나 증가했으며 1~2월 남북교역을 항목별로 보면 대북 반출이 1억6천만 달러로 작년 동기간(1억800만 달러)보다 48%나 급증했고, 대북 반입도 전년 동기간(1억2천600만 달러)보다 25% 늘어난 1억6천만 달러에 달함.

● **국회대표단, 총리실내 탈북자 전담부서 설치 요구(3/16, 연합뉴스)**

- 탈북자 강제송환 저지 여론 확산을 위해 스위스 제네바를 방문하고 귀국한 국회대표단(단장 김형오 전국회의장)은 16일 강제북송 저지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위해 총리실내 탈북자 전담부서를 설치할 것을 요구
- 김형오 단장은 이날 인천공항에 도착한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탈북자는 외교통상부, 통일부 등 전 부처와 관련이 있는 만큼 총리실에 기구가 필요하다"며 "대표단이 김황식 총리를 방문해 공식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밝혔음.

● **정부 "北위성발사 중대한 도발적 행위될 것"(3/16, 연합뉴스)**

- 정부는 16일 북한이 김일성 주석 100회 생일을 맞아 '광명성 3호 위성'을 발사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적 행위가 될 것"이라고 밝혔음.
- 조병제 외교 통상부 대변인은 '북한 우주공간기술위원회 대변인 담화에 대한 논평'에서 "북한이 발표한 대로 실용위성을 발사한다면 이는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 기타 (대남)

- '최고존엄 모독' 관련 '이○○역도와 군부호전광들을 비롯한 역적패거리들을 쓸어버리기 위한 전민항전을 벌리자'고 지속 선동(3.12, 중통·노동신문·중방·정의의 보복성전은 반드시 승리한다)
- '전쟁의 근원을 송두리째 들어내야 한다', '호전광들의 도전적 망동' 題下로도 '보복 성전' 지속 위협(3.12, 중통·노동신문)
- '탈북자 문제는 보수패당이 北 사람들을 유인·납치해 생긴 문제로 인권과는 관련이 없는 문제'라고 강변하며, '反北 인권 및 탈북자 북송반대 소동' 중단 재차 촉구(3.13, 우리민족끼리/극악한 동족대결 정책의 산물-탈북자북송반대 소동)
- 김문수 경기도 지사의 발언(北 인권법 국회 통과, 탈북자송환 중지 등)에 대해 '진실을 오도하는 기만극, 궤변'으로 폄하(3.13, 우리민족끼리/추악한 인간퇴물의 입방아질, 인간추물의 광대극)
- [조선반핵평화촉] , 3.14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3.26~27)는 "핵전쟁을 합리화하는 핵전쟁모의판이 될 것"이라고 비난 '백서' 발표(3.14, 중통)
- 李대통령과 외교통상부 장관의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서 '북핵문제 논의 가능' 등 발언 비난 및 '자위적 핵억제력 백배 강화' 대응 위협(3.14, 중방·노동신문·우리민족끼리/용납될 수 없는 반공화국 핵소동·무엇을 문제시하여야 하는가)

● 북한연구센터 제공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리용호 "北 핵사찰 가까운 시일 내 이뤄질 것"(3/13)

- 미국 뉴욕을 방문중인 북한의 리용호 외무성 부상은 12일(현지시간) 북한 핵시설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이 가까운 시일 내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6.16 공동선언과 10.4 공동선언의 이행이 중요하나 남측이 아직 의지가 없는 것 같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6자회담 북한측 대표인 리 부상은 이날 뉴욕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기 앞서 숙소인 밀레니엄 플라자 앞에서 잠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 리 부상은 IAEA 사찰 시기가 언제쯤 될지를 묻는 질문에 "가까운 앞날에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2월 있는 조미(북미)간의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이 계속 취해지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남북대화는 언제쯤 이루어질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우리 기본입장은 6.15 공동선언과 10.4 공동선언, 이 두가지 남북 역사에서 제일 처음으로, 최고위급에서 합의된 두가지 중요한 합의를 이행할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이 기준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리 부상은 이어 "남측이 이런 선언들을 존중하고 이행할 의지가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손을 잡고 같이 가려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의지가 없는 것 같다"고 덧붙혔음.
- 시리큐스대 행정대학원 맥스웰스쿨 등이 주최한 세미나와 미국외교정책 전국위원회(NCAFP) 주최 간담회 등에 참석한 리 부상은 "이 두가지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에 온 것"이라면서 "회의는 잘됐고 충분한 의견 교환을 가졌다. 앞으로 북미관계 문제해결과 관련된 문제들도 많이 토론했다. 회의 결과에 만족한다"고 밝혔다. 그는 북미관계에 대해서는 "미국이 관계를 개선하기를 바란다면 우리도 기꺼이 받아들인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 그는 북한이 미국에 서로의 수도에 연락사무서를 개설하자고 제의했다는 일본 요미우리신문의 보도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제안한 것은 없고 원칙적인 입장을 기본으로 밝혔다. 북미간에 적대관계가 종식되는게 제일 기본문제다. 이것이 다른 모든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고 또 기초라고.. 이런 원칙적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리 부상은 또 '북한 지도자 김정은이 뉴욕의 유엔본부를 방문할 의사를 밝혔다'는 소식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토론회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이 그런 문제를 제기했다. 저희가 한 것은 아니다. 방문의사에 대해서는 내가 딱히 말씀드



릴 위치에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 리용호 부상 일행은 이날 문답을 마친 뒤 곧바로 호텔을 출발, 귀국길에 올랐음.

나. 미·북 관계

● "北, 美에 연락사무소 설치 제안"〈日紙〉(3/12)

- 북한이 최근 미국 측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하자고 요구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12일 '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음. 보도에 따르면 북한의 리용호 외무성 부상은 지난 10일 뉴욕에서 열린 한 비공개 세미나에서 "올해 안에 양국 수도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하길 바란다. 이건 최상부(김정은을 지칭)의 뜻이다"라고 말했음.
- 리 부상은 또 지난달 북미 양국이 합의한 우리농 농축 활동 정지 등과 관련해 국제원자력기구(IAEA) 요원들이 "조만간 (북한에) 입국할 것"이라며 이달 말이나 내달 초에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음. 또 5월이나 6월에는 북한의 국립교향악단이나 태권도 대표단이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북미 양국은 1994년 10월에 교환한 북미 기본합의문(제네바 합의문)에도 '연락사무소 개설'이라는 항목을 포함했지만, 실현되지는 않았음.

● 美 1월 대북수출 486만 달러...대부분 구호용(3/13)

- 올해 1월 북미 간 교역액이 486만4천 달러로 집계됐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무역통계 자료를 인용해 13일 보도했음. 이는 지난해 전체 북미 교역액 940만 달러의 절반을 넘는 수치임. 수출입별로 보면 북한의 대미수출은 전혀 없고 모두 미국이 북한에 수출한 것임.
- 미 상무부는 어떤 품목을 북한에 수출했는지 밝히지 않았으나 현재 양국 간 상업적 거래가 사실상 중단된 점을 감안하면 대부분 대북 구호용으로 지원된 물품으로 보임.

● 美, '광명성 3호' 발사 계획 "매우 도발적"(종합)(3/16)

- 미국은 16일 북한이 다음달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겠다고 발표한데 대해 "매우 도발적인 계획"이라고 비난했음. 미 국무부의 빅토리아 눌런드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이러한 미사일 발사는 지역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것이며 또한 북한이 최근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삼가하겠다고 다짐한 것과는 모순된 태도"라고 말했음.
- 눌런드 대변인은 "유엔 결의 1718호와 1874호는 분명하고도 명백하게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로 활용할 수 있는 발사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음. 그는 "북한이 모든 관련 유엔 결의를 비롯해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기를 촉구한다"면서 "우리는 국제사회의 파트너들과 함께 대응책을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 美 "北 로켓발사時 식량지원 어렵다"(종합2보)(3/17)

- 미국 정부는 16일(현지시간)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계획과 관련, "이를 강행하면 식량을 지원하는 일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빅토리아 놀런드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로켓 발사는 북한의 신의를 의심하게 만들고, 식량 선적을 추진할 우호적인 분위기 조성을 해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 놀런드 대변인은 북측의 이날 발표가 지난달 29일 중국 베이징(北京) 고위급 회담 합의사안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그는 "로켓 발사를 강행한다면 북한 정권은 국제사회에서 한 약속을 터무니 없이 어기는 것이므로 미국은 북한의 발언을 신뢰할 수 없으며 북측과 일을 진행하기 매우 어렵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은 베이징 대화 당시 이런 장거리 로켓 발사는 합의 폐기를 의미한다는 점을 북측에 이미 경고했기 때문에 이번 위성발사 발표는 북측의 약속이 신뢰할만한 것인지 의심하게 만든다"고 전했다.
- 미국은 인도적 관점에서 북한에 식량지원을 제안했으며 북측의 양보에 대한 대가로 주는 것은 아니라고 밝힌 바 있어 이번에 북한의 로켓 발사를 이유로 식량선적을 중단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대해 놀런드 대변인은 미국은 식량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이 식량이 정권의 엘리트 계층으로 흘러가는 것을 감시하겠다고 했으며 북한도 그 모니터링을 허용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로켓을 발사한다면 모니터링에 대한 북측 약속의 신뢰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게된다고 밝혔다.
- 놀런드 대변인은 "어제 오후 뉴욕채널을 통해 북한이 이(로켓발사)를 강행할 것 같다는 소식을 전해들었다"면서 "그 메시지를 (북측으로부터) 전해받은 사람은 당시 (미 정부의) 관련된 훈령이 없는 상태였지만 로켓 발사의 합의가 무엇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로부터 몇시간 후에 북한의 보도가 있었다"며 "우리가 새벽 4시에 이례적으로 성명을 낸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 놀런드 대변인은 글린 데이비스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북한의 발표와 관련해 이미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참가국과 전화통화를 통해 논의했다고 전하면서 "통화 상대 가운데 북측의 발표에 놀라지 않은 이가 없었다"고 말했다. 북한은 우리농농축프로그램(UEP) 기동중단을 포함한 비핵화 및 미사일 시험을 유예하겠다고 지난달 미국에 약속했으나 4월에 장거리 로켓인 광명성 3호위성을 발사할 계획이라고 이날 전격 발표했다.
- 북한은 '광명성 3호'가 평화적 목적의 위성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미국 측은 로켓에 핵탄두만 장착하면 장거리 미사일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북미간의 미사일 시험 유예 약속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음. 북측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단원 방문도 곧 허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6자회담 재개에 대한 기대감도 커져왔음.
-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이날 성명을 내고 북한에 대해 장거리 미사일 발사 계획을 재고해줄 것을 촉구했음. 반 총장은 이날 북한의 발표가 매우 우려스럽다면서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자제하겠다는 최근의 약속



을 지키는 차원에서 위성 발사 계획을 재고해야 한다고 촉구했음. 한편 최근 부임한 최영진 신임 주미대사는 이날 웬디 셔먼 국무부 정무차관과 만나 북한의 로켓 발사 발표에 대해 긴급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 조선중앙통신-AP 공동사진전 뉴욕서 개막(3/17)

- 북한 조선중앙통신사와 미국 AP통신사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사진전이 16일 미국 뉴욕에서 개막했다고 미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7일 전했다. 작년 6월 조선중앙통신사와 AP통신 사이에 체결된 MOU(양해각서)에 따라 열린 이번 공동사진전은 '북한의 창이란 주제로 다음달 13일(현지시간)까지 계속됨. 이번 사진전이 열리는 뉴욕시의 'The 8th Floor' 갤러리에는 두 통신사가 그동안 찍은 북한 주민의 일상, 북한 지도부의 현장시찰 모습, 자연경관, 도시 전경 등 북한 관련 사진 79점이 전시됐음.
- AP통신의 폴 콜포드 공보국장은 "전시 중인 사진의 절반은 AP통신의 외국인 기자들이, 나머지 절반은 조선중앙통신의 북한 기자들이 찍은 것"이라며 "관람객은 북한의 모습을 두 통신사가 어떻게 다르게 표현했는지 비교해볼 수 있다. 이것이 이번 전시회의 묘미 중의 하나"라고 소개했음. 콜포드 국장은 이어 "중앙통신과 AP의 공동사진전을 조만간 평양에서도 열 계획"이라고 밝혔음.
- RFA는 이번 전시회를 위해 조선중앙통신사 관계자 4명이 뉴욕을 방문 중이라고 전했다. 앞서 조선중앙통신은 "김창광 1부사장이 이끄는 조선중앙통신사 대표단이 미국 뉴욕에서 진행되는 공동 사진전시회에 참가하기 위해 10일 평양을 출발했다"고 밝혔음.

다. 중·북 관계

● 北 6자회담 대표 리용호, 中방문(3/18)

- 북한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리용호 외교부 부상이 17일 베이징을 방문했음. 지난 7-9일 미국 시라큐스대학교 행정대학원인 맥스웰스쿨과 독일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이 공동주최하는 한반도 세미나 참석차 미국을 방문했던 리용호 부상은 귀국하는 길에 러시아에 이어 이날 중국을 찾았다고 베이징 외교 소식통이 전했다.
- 리용호 부상은 중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한반도사무 특별대표 등을 만나 6자회담 재개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중국이 우려를 표명한 북한의 '광명성 3호 위성(장거리 로켓) 발사계획을 둘러싼 각종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북한의 '광명성 3호 위성' 발사 계획에 대해 이례적으로 '우려와 '한반도 평화 안정에 대한 공동책임' 등을 거론하며 자제를 촉구했음.
- 중국 외교부의 장즈진(張志軍) 부부장은 지난 16일 지재룡 주중북한대사를 만나 북한의 '광명성 3호 위성' 발사 계획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음.



장 부부장은 북한의 위성발사 계획에 대해 '주의'하고 있으면서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 유지는 관련 당사국들의 공동 책임이며 공동이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각 당사자들이 냉정을 유지하고 자제력을 발휘해 사태가 고조되는 것을 막고 더욱 복잡한 상황이 초래되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라. 일·북 관계

● "日, 북한과 북송 일본인 처 귀국 협의"(3/15)

- 일본이 북한과 이번 주말 '북송 일본인 처'의 귀국 문제를 협의한다고 산케이신문이 15일 보도했음. 이 신문은 북수의 정부 고위관계자를 인용해 민주당 중의원인 나카이 히로시(中井裕) 전 공안위원장이 이번 주말 북한 측과 1950~1980년대 재일동포와 함께 북한으로 건너간 이른바 '북송 일본인 처'의 귀국 문제를 협의한다고 전했다.
- 신문에 의하면 나카이 전 공안위원장은 17일과 18일 몽골을 방문할 예정이며, 이 기간 북한의 송일호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 담당 대사와 협의에 나설 것으로 보임. 나카이 전 공안위원장은 애초 17~19일 대만을 방문해 '일-대만 의원 간담회'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급거 일정을 바꿨음. 나카이 전 공안위원장은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에게 북한과의 극비 접촉 계획을 전달해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나카이 전 공안위원장은 지난 1월 9~10일에도 노다 총리의 사전 승인 아래 중국 선양에서 송 대사와 접촉한 바 있음.
- 북한은 일본인 처의 귀국 문제 협의를 대가로 일본 측에 식량 등의 지원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음. 이는 북한이 우리나라 농축의 일시 중단을 대가로 미국으로부터 식량을 지원받기로 한 북미 합의의 연장선임. 하지만, 북한은 일본이 강력하게 요구하는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자 문제 협의에는 응하지 않고 있어 일본인 처 귀국 문제 협의를 원활하게 진행될지는 불투명함.
- 1959년부터 1984년까지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일본 니가타(新潟)와 북한 청진을 잇는 만경봉호 등을 타고 재일동포 9만 3천여 명이 북한으로 건너갔고, 이중 1천800여 명은 일본인 아내였음. 북송 일본인 처는 1997년과 1998년, 2000년 3차례에 걸쳐 북일 적십자사를 통해 일본에 있는 고향을 방문했지만, 2002년부터 일본인 납치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중단됐음.

● 日 언론 "北 위성 발사는 미사일 실험"(3/16)

- 북한이 16일 인공위성을 탑재한 로켓을 다음달 발사하겠다고 발표하자 일본이 민감하게 반응했음. 교도통신 등 현지 언론에 의하면 일본 방위성과 외무성은 북한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의 위성 발사 계획 발표 직후 일제히 정보 수집 등 경위 파악에 나섰다.
- 다나카 나오키(田中直紀) 방위상은 이날 오후 중의원 안전보장위원회에



서 "정보 수집과 경계 감시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음. 외무성 간부는 "탄도미사일 발사 중단을 요구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위반일 가능성이 있으며, 우리나라 농축 일시 중단에 합의한 지난달의 북미 합의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음.

- 아사히신문은 "(북한이 발사하는) 로켓은 장거리 미사일과 동일한 성능이어서 지난달 하순 북미 합의에 반할 가능성이 있으며, 한미일 등 국제사회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보도했음. 이 신문은 "북한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는 평화적 과학기술위성의 발사라고 주장하지만, 북한은 2009년 4월에도 인공위성 발사를 빙자해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며, 이번에도 미사일 발사 실험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 요미우리신문도 "북한은 지금까지 인공위성 명목으로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했다"면서 "이번에도 같은 양상일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음. 이 신문은 "북한이 위성 발사를 예고한 4월 15일은 고(故) 김일성 주석의 탄생 100주년이 되는 날이다"면서 "북한의 새로운 지도자인 김정일의 실적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음.
- 마이니치신문은 "북한은 1990년대부터 일본 거의 전역을 사정에 둔 중거리 탄도미사일 '노동'을 개발했고, 1998년에는 시험 발사된 대포동 1호가 일본 열도를 넘어 태평양에 낙하했다"면서 "당시에도 북한은 인공위성을 발사했다고 주장했었다"고 전했다. 교도통신 역시 북한의 위성 발사는 사실상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이어서 한국과 미국, 일본 등 국제사회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보도했음.

● "日, 북한 발사 위성 日 항할땐 요격 검토"(3/17)

- 일본 정부가 북한이 다음 달 발사하는 인공위성이 일본을 항할 경우 미사일방어(MD) 시스템으로 요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7일 보도했음. 이 신문에 의하면 일본 정부는 북한의 위성을 MD 시스템으로 요격하기 위해 자위대법에 근거한 '파괴조치명령'을 발령하는 방향으로 검토에 들어갔음. 북한은 서해 쪽으로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그렇게 될지 의문인데다 설사 서해로 위성을 발사해도 일본 남부의 섬이 영향권에 들어가기 때문임.
- 북한이 2009년 4월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당시 미국과 일본 정부는 조기경계위성과 경계관제레이더 외에 동해에 전개된 양국의 이지스함과 항공자위대의 공중경계관제기 등이 출동한 바 있음. 이번에도 북한이 위성을 발사할 경우 미국과 일본은 당시와 같은 경계태세와 정보수집에 나설 것으로 보임. 방위성은 16일 밤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미국과 협력해 북한의 위성 발사대 분석과 반입 물자의 감시에 전력을 다하기로 했음. 다나카 나오키(田中直紀) 방위상은 중의원 안전보장위원회에서 "정보수집, 경계감시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음.
- 한편,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는 16일 방일 중인 라오스 총리와의 회담에서 "북한에 강한 자세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음.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郎) 외무상은 한국, 미국, 중국과 협의를 진행했다면서 "북한



에 자제를 요구하는 기본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 北, 日에 "북송 일본인 처 문제 우선 협의하자"(3/18)

- 북한이 일본에 피랍자 문제를 유보하고 북송 일본인 처 문제를 우선 협의하자고 제안했음. 18일 NHK방송과 교도통신에 의하면 북한의 송일호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담당 대사는 17일 몽골의 울란바토르에서 일본 측 관계자와 접촉한 뒤 기자회견에서 이런 견해를 밝혔음.
- 그는 일본이 강력하게 해결을 요구하는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자 문제와 관련 "일본 측에서 해결을 외치는 사람 중에는 이 문제를 전면에서 내세워 북일 관계를 악화시키려는 사람이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인 피랍자 문제와 관련한 북일 교섭이 교착상태에 빠진 데 대해서는 "정부 간에 꾸준한 대화가 있었지만 양국 관계는 오히려 악화했다"고 말해, 이 문제를 대화의 의제에서 제외하지는 견해를 밝혔음.
- 그는 그러나 재일 조선인(북한인) 남편을 따라 북한에 건너간 이른바 '북송 일본인 처'의 일시 귀국 문제와 요도호 납치범의 송환, 2차 세계대전 이후의 혼란기에 북한에 남아있다가 사망한 일본인의 유골 반환 등과 관련해 최근 나카이 히로시(中井淸) 전 공안위원장과 대화가 있었다고 밝혀, 이들 문제에 대해서는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음.
- 송 대사가 일본과 협의 중인 내용을 기자회견에서 언론에 공개한 것은 이례적임. 이는 북한이 일본과 대화 의사가 있다는 것을 보여줌. 송 대사는 지금까지 일본 측과의 접촉 사실이나 대화 내용을 부인해왔음. 일본은 애초 나카이 전 공안위원장이 울란바토르에서 송 대사와 접촉할 계획이었으나 사전에 언론에 보도되면서 자민당 등이 강력하게 반발하자, 대리인으로 다쿠쇼쿠(拓殖)대학의 마나베 사다키(眞鍋貞樹) 교수를 내세워 송 대사와 접촉하도록 했음.
- 한편 '북송 일본인 처'는 1959년부터 1984년까지 만경봉호 등을 타고 북한에 건너간 재일조선인(9만 3천여 명)의 일본인 아내(약 1천800여 명)를 일컫는음. 북송 일본인 처는 1997년과 1998년, 2000년 3차례에 걸쳐 북일 적십자사를 통해 일본에 있는 고향을 방문했지만, 2002년부터 일본인 납치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중단됐음.

마. 러·북 관계

● 북·러 "북한 경유 가스관사업 협력강화"(3/15)

- 최근 뉴욕을 방문했던 북한의 리용호 외무성 부상이 귀로에 러시아를 방문해 한반도의 비핵화 및 북한 경유 러시아 가스관 건설 프로젝트에 관한 협력방안을 협의했음. 리용호 부상은 14일(현지시간) 모스크바에서 러시아 외교부의 안드레이 데니소프 제1차관과 회담을 갖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한 양국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음. 러시아 외교부는 회담이 끝난뒤 발표한 성명을 통해 "양국 차관은 한반도의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관해 서로 의견을 교환했다"면서 "한반도의 비핵



화를 위해 양국이 긴밀히 협력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 양국 외교부 차관은 또 북러 양자관계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며, 특히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북한을 경유하는 가스관을 건설해 한국으로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러시아 외교부 측은 밝혔다.
- 리용호 부상은 러시아 방문을 마친뒤 중국도 방문해 중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한반도사무 특별대표등을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뉴욕을 방문했던 리용호 외무성 부상은 12일(현지시간) 북한 핵시설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이 가까운 시일 내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 **러 외무부, 北 로켓 발사 계획에 '심각한 우려'(3/17)**

- 러시아 외무부는 16일(현지시간) 북한이 다음 달 인공위성을 탑재한 로켓을 발사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것에 대해 우려한다고 밝혔다. 외무부는 홈페이지에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의 위성 발사 계획 발표는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는 것"이라며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바. 기 타

● **국경없는기자회, 北 '인터넷 적대국' 또 지목(3/13)**

- 국제 언론감시단체인 '국경없는기자회'(RSF)가 올해도 북한을 인터넷 적대국으로 지목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3일 보도했다. 국경없는기자회는 최근 발표한 '2012년 인터넷 적대국'에서 지난해 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소식이 이틀간 비밀로 지켜지다가 조선중앙TV의 특별방송으로 발표된 것은 언론과 정보에 대한 북한 정권의 철저한 통제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이 선전전을 위해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고, 웹사이트를 파괴하고 간첩행위를 하기 위한 해커군단으로 무장돼 있다고 주장했다.
- 이 단체는 인터넷 자유를 통제하는 인터넷 적대국으로 북한, 중국, 미얀마, 이란, 쿠바, 베트남 등 총 12개 국가를 선정했다.

● **北 '위성 발사' 발표에 日·中 민감 반응(종합)(3/16)**

- 북한이 16일 인공위성을 탑재한 로켓을 다음달 발사하겠다고 발표하자 일본과 중국 등 주변국들이 민감하게 반응했다. 후지무라 오사무(藤村 修) 일본 관방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번 발사는 인공위성이든 탄도 미사일이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에 위반되는 행동"이라며 "북한이 로켓 발사를 자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로켓 발사가 회담을 통해 여러 문제를 해결하려던 노력을 다시 원점으로 돌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교도통신 등 현지 언론에 의하면 일본 방위성과 외무성은 북한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의 위성 발사 계획 발



- 표 직후 일제히 정보 수집 등 경위 파악에 나섰다.
- 다나카 나오키(田中直紀) 방위상은 오후 중의원 안전보장위원회에서 "정보 수집과 경계 감시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외무성 간부는 "탄도미사일 발사 중단을 요구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위반 일 가능성이 있으며, 우리나라 농축 일시 중단에 합의한 지난달의 북미 합의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아사히신문은 "(북한이 발사하는) 로켓은 장거리 미사일과 동일한 성능 이어서 지난달 하순 북미 합의에 반할 가능성이 있으며, 한미일 등 국제 사회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북한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는 평화적 과학기술위성의 발사라고 주장하지만, 북한은 2009년 4월에도 인공위성 발사를 빙자해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며, 이번에도 미사일 발사 실험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 요미우리신문은 "북한이 위성 발사를 예고한 4월 15일은 고(故) 김일성 주석의 탄생 100주년이 되는 날이다"면서 "북한의 새로운 지도자인 김정은의 실적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마이니치신문은 "북한은 1990년대부터 일본 거의 전역을 사정에 둔 중거리 탄도미사일 '노동'을 개발했고, 1998년에는 시험 발사된 대포동 1호가 일본 열도를 넘어 태평양에 낙하했다"면서 "당시에도 북한은 인공위성을 발사했다고 주장했었다"고 전했다. 교도통신 역시 북한의 위성 발사는 사실상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이어서 한국과 미국, 일본 등 국제사회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 중국 외교부의 류웨이민(劉爲民)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광명성 3호 위성 발사' 발표에 대한 질문을 받은 뒤 "북한이 발표한 소식에 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는 각 관련국의 이익에 부합하며 이는 또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기대"라면서 "각 관련국들이 건설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북한의 '광명성 3호 위성' 발사가 한반도와 동북아에 몰고 올 파장을 중국이 경계하고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 분석됨.
 - 관영 신화통신은 북한의 '광명성3호 위성' 발사 소식을 긴급 보도하고 쿼퀴닷컴 등 주요 포털들도 주요 뉴스로 다루는 등 비중있게 보도했다. 신화통신 등은 '북한의 광명성 3호 위성' 발사를 북한측의 발표를 아무런 논평없이 그대로 소개하는 식으로 전하고 있음.

● 潘총장, 북한 로켓발사 계획 취소 촉구(종합)(3/17)

-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16일(현지시간) 북한에 대해 장거리 미사일 발사 계획을 취소할 것을 촉구했다. 예정대로 다음달에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위배하는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반 총장은 이날 마틴 네시르키 대변인을 통해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자제하겠다는 최근의 약속을 지키는 차원에서 위성발사 계획을 재고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 이어 북한은 지난 2009년 채택된 결의 1874호를 포함해 안보리의 관련



제재 결의를 철저히 준수해야 할 것이라는 점도 거듭 강조했음. 북한의 2차 핵실험 직후 채택된 결의 1874호는 탄도 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어떤 로켓의 발사도 금지하고 있음.

- 앞서 북한은 장거리 로켓인 광명성 3호위성을 다음달에 발사할 계획이라고 전격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29일 베이징에서 열린 북미 고위급 회담에서 미국의 영양원조에 대한 대가로 장거리 미사일 시험을 중단하기로 합의한지 16일 만의 일임. 네시르키 대변인은 "반 총장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계획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 <광명성3호' 놓고 北-국제사회 '불꽃 공방전'(3/18)

- 북한의 장거리 로켓인 '광명성 3호 위성' 발사 계획을 둘러싼 외교적 공방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북한의 이번 발사계획이 발표되자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미사일 위협' '유엔결의 위반'이라며 계획 취소를 촉구했고, 중국조차도 이례적으로 북한 대사를 초치해 '우려'를 표명했음.
- 빅토리아 놀런드 미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북한이 발사를 강행한다면 식량지원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밝혔음. 중국의 외교부 장즈쥘(張志軍) 부부장도 지난 16일 지재룡 주중 북한대사를 불러 "중국은 북한의 위성계획과 국제사회의 반응에 주의하고 있다"고 이례적으로 우려의 입장을 전달했음.
- 북한이 '광명성 3호'를 종전과 달리 서해 동창리발사장에서 남쪽 방향으로 발사할 경우 우리 정부와, 중국, 대만, 필리핀 등 주변국이 예민하게 반응하거나 강한 반발을 보일 수도 있음. 그럼에도 북한은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위성 발사'라고 되받아치면서 바로 '발사현장 공개' 카드를 내미는 등 공세적으로 대응했음.
- 과거에 장거리 로켓 발사현장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던 북한은 17일 이번에는 발사실황을 외국의 전문가와 기자들이 볼 수 있도록 초청하겠다는 뜻까지 밝혔음. 북한의 입장을 종합해보면 유엔 회원국으로서의 합법적 권리라고 주장하는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과 개발' 권리를 되찾고, 동시에 이번 계획이 북미 합의사항(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유예)과 국제사회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나타낸 셈임. 이제 위성체이든 미사일이든 어떤 경우도 모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1874호) 및 북미 합의 위반이라는 입장인 미국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 외교적 공방의 향방이 갈리게 됐음.
- 이정우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는 "현재 식량지원 중단 이외 결정적 제재수단이 없는 미국 입장에서는 이번 북한의 공세적인 외교대응으로 인해 딜레마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음. 이 교수는 특히 "대화로 문제를 풀고자 하는 중국이 북한 제의를 받아들여 전문가와 기자들을 파견해 발사현장을 참관하는 등 미국과 협조보다는 북한의 주장에 힘을 실어준다면 미국의 입장이 난처해 질 수도 있다"고 내다봤음.
- 북한이 '광명성 3호' 발사 장소와 방향을 과거와 달리하고, 발표 이후 국제사회의 비난에도 바로 발사현장 공개라는 맞대응 카드를 제시했다



는 점도 주목할만한 대목임. 이런 점에 비춰 볼 때 이미 북한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전에 북미관계 개선을 통해 체제보장을 받기 위한 치밀한 계획을 세워 놓고 올해 들어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됨.

-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대변인은 16일 담화에서 "운반로켓 '은하3호'는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 위성발사장에서 남쪽 방향으로 발사된다"며 "위성발사 과정에서 산생되는 운반로켓 잔해물들이 주변 국가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비행궤도를 안전하게 설정했다"고 밝혔음. 조선중앙통신은 18일 논평에서도 "우리는 국제적 규정과 절차에 따라 국제기구들에 필요한 자료들을 통보했으며 다른 나라들의 전문가와 기자들을 발사현장에 초청하려는 의사도 표시했다"고 밝혔음.
- 북한이 밝힌 발사 장소인 평북 철산군 서해 위성발사장은 2010년경에 건설된 동창리 발사장으로 추정됨. 이 시설에 대한 대략적인 정보는 한미 양국에 의해 공개된 바 있음. 이를 토대로 미사일 문제 전문가인 데이비드 라이트 박사는 지난 2011년 2월23일 북한 전문 웹사이트를 통해 동창리 발사기지에서의 발사경로를 제시한 바 있음. 당시 제시한 경로는 이번에 북한이 발표한 경로와 거의 유사한 궤도임.
- 북한이 밝힌 것처럼 북한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국제해사기구(IMO)에 통보한 위도, 경도 등의 자료에 따르면 북한이 원래 계획한 대로 광명성 3호의 발사가 이뤄지면 1차 추진체는 변산반도 140km 지점 공해상에, 2차 추진체는 필리핀 동쪽 190km 공해상에 각각 떨어질 것으로 분석됨. 이미 공개된 정보와 이를 토대로 한 예상대로 북한이 행동을 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의 이번 발사계획 발표는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모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한반도 문제의 포괄적 해결을 추진하려는 것 같다"고 분석했음.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韓美정상, 내일 FTA 발효 계기 전화통화(3/14)

-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오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를 서로 축하할 예정임. 양국 정상은 통화에서 한미 FTA 발효에 따라 나타날 일자리 창출, 상호 수출 증대 등 다양한 경제적 효과를 평가하고 앞으로 협정의 순조로운 이행을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을 것으로 알려졌다.
- 두 정상은 또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북핵 문제 해결 및 대북 대응과 관련한 양국간 공조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자고 합의할 것으로 전해졌음. 이밖에 열흘 앞으로 다가온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의 성공



적 개최 방안과 이를 계기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 의제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 **韓美 정상 "FTA 발효로 경제발전 기대"(3/15)**

-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를 계기로 전화통화를 갖고 양국간 교역 확대를 통한 경제 발전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음. 이 대통령은 오전 6시30분부터 10분간 진행된 통화에서 "한미 FTA 발효가 양국 경제 발전 및 양국의 관계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그동안 오바마 대통령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 이 대통령은 "한미 FTA는 높은 수준의 협약으로 세계 자유무역의 좋은 모델이 될 것"이라며 "미국 경제가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은 미국 경제뿐 아니라 세계 경제에 좋은 신호"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 FTA 발효를 기쁘게 생각한다. 이 대통령에게 감사한다"면서 "양국민과 양국 동맹에 중요한 일"이라고 평가했음.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FTA 발효를 계기로 양국의 투자, 교역, 수출,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며 "우리 두 나라가 전 세계 시장 개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그는 또 "2주 후 한국 방문시 만남을 고대하고 있다"면서 "성공적인 핵안보 정상회의를 통해 핵테러 예방을 위해 협력하고 북한을 포함한 동북아 정세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의 제안으로 시작된 핵안보정상회의는 세계 역사에 큰 의미가 있다"면서 "이달 말 만나기를 기대하며 양자회담 등을 통해 동북아 정세에 대해서도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길 바란다"고 답했음.

● **포천서 한·미 연합 소부대 훈련(3/15)**

- 한국군과 미군은 연합작전 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15일 오후 경기도 포천시 로드리게스 미군 사격장에서 한·미 연합 소부대 훈련을 했음. 훈련에는 1기갑여단 소속 장병 100여명과 미 주방위군 1군단 65화력여단 145포병대대 소속 장병 200여명 등 모두 300여명이 참가했음. 예비군 위주로 편성된 미군 145포병대대는 미국 유타주에 주둔하다가 이번 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지난 9일 방한했음. 18일 돌아감.
- 훈련은 1기갑여단의 K-55 자주포 6문과 미군의 M-109A6 자주포 12문으로 실사격하는 방식으로 오후 1시30분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됐음. 1기갑여단의 한 관계자는 "한국군과 미군은 유사시 작전수행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연간 5차례 정도 소부대 훈련을 함께 하고 있다"며 "실전을 방불케 하는 사격훈련으로 상호 장비의 운용상태를 확인하고 전술을 공유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나. 한·중 관계

● <한중, 이번엔 '이어도 관할권' 충돌>(종합)(3/12)

- 한국과 중국이 이번에는 이어도(중국어명 쑤옌자오·蘇巖礁) 관할권을 놓고 외교갈등을 빚고 있음. 중국 어선의 서해 불법조업과 탈북자 강제북송 등을 놓고 마찰을 빚고 있는 한중관계가 이어도 관할권 문제로 더 꼬여가는 양상임.
- 류츠구이(劉賜貴) 중국 국가해양국장(장관급)은 지난 3일 관영 신화통신(新華通信)과의 인터뷰에서 "이어도가 중국관할해역에 있고 감시선과 항공기를 통한 정기순찰 범위에 포함돼 있다"며 이어도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했다. 중국은 간헐적으로 이어도 해역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해 왔지만 이어도가 정기순찰 대상에 포함된다고 선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 이어서 주목을 받았음.
- 중국 고위 당국자의 이런 주장이 국내 언론에도 보도되자 외교통상부는 12일 장신썬(張愼<金 3개>森) 주한 중국대사를 불러 중국 정부의 진의를 따져 물었음. 김재신 외교부 차관보는 장 대사와의 면담 자리에서 "이어도는 한중 간의 배타적경제수역(EEZ·해안선에서 370km 이내의 경제주권이 인정되는 수역) 경계획정 전이라도 우리측 관할 범주에 들어오는 수역으로 중국측이 공식적으로 관할권을 행사하려는 시도라면 수용할 수 없다"며 공식 항의했음. 이에 장 대사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본국에 전달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이어도 주변 수역은 중국측의 EEZ에도 포함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 당초 김 차관보와 장 대사의 면담은 탈북자 문제와 함께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한·중 수교 20주년 기념행사 준비현황 등을 논의하는 자리였지만 이어도 관할권 논란이 불거지면서 이 문제가 핵심의제로 다뤄졌음. 앞서 이날 오전 외교부와 중국대사관의 실무협약에서도 외교부측은 "중국 정부가 이어도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할 경우 우리 정부는 단호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전달한 반면 중국 대사관측은 한국이 이어도에 과학기지를 건설한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등 평행선을 달렸음.
- 한국 최남단 섬인 마라도에서 149km, 중국 동부 장쑤(江蘇)성 앞바다 가장 동쪽의 퉁다오(童島)로부터 247km 떨어져 있는 이어도는 한국과 중국의 EEZ가 중첩되는 곳으로 양국은 1996년부터 EEZ 경계획정 협상을 벌이고 있음. 정부는 EEZ 경계획정 협상과는 별개로 관할권이 우리에게 있다고 보고 2003년 이어도에 과학기지를 설립하고 해양조사 및 연구활동을 진행 중임. 이에 대해 중국은 2007년 12월 국가해양국 산하기구 사이트를 통해 이어도를 자국영토라고 주장했으며 지난해에는 자국 EEZ를 침범했다며 이어도 인근에서 인양작업을 하던 한국 선박에 작업중단을 요구한 적도 있음.
- 양국은 EEZ 경계획정을 통해 이어도를 둘러싼 갈등을 풀 수 있다는 점에는 공감하나 양측의 견해차가 워낙 커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



황입. 우리 정부는 이어도가 우리 영토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점유를 통해 관할권을 행사한다는 전략인 반면 중국은 해안선의 길이나 배후 인구 등을 고려할 때 이어도의 관할권은 자국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 정부, 中대사에 '이어도 관할권주장' 항의(종합)(3/12)

- 외교통상부 김재신 차관보는 12일 장신썬(張愐<金 3개>森) 주한 중국대사를 불러 류츠구이(劉賜貴) 중국 국가해양국장(장관급)의 이어도 관할권 주장에 대해 공식 항의했음. 김 차관보는 "한중간 배타적 경제수역(EEZ) 경계가 획정되기 전이라도 이어도 수역은 우리측 관할 범주에 있다"면서 "이번 일이 중국측이 공식적으로 관할권을 행사하려는 시도라면 우리는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고 외교부 당국자가 전했음.
- 김 차관보는 "이어도 문제는 양국간 EEZ 경계획정을 통해 해결할 문제"라면서 "EEZ 경계획정 회담을 통해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될 기대한다"고 조속한 회담 개최를 촉구했음. 이어 "류 국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어떤 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그 내용과 의도, 배경에 대해서 사실 관계를 확인해달라"고 요구했음.
- 이에 대해 장 대사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본국에 전달하겠다"고 답했음. 그러면서 "이어도 주변 수역은 중국측의 EEZ에도 포함된다"면서 "거기에 대해서는 한국측도 이해해달라"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 차관보와 장 대사는 "이어도는 섬이 아닌 암초로 영토 분쟁의 대상이 아니다"는 것에는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음.
- 앞서 외교부 담당자도 이날 오전 주한 중국대사관의 담당과장과 면담을 하고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음. 중국대사관 담당 과장도 이어도가 중국의 EEZ에 속한다는 자국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음. 이 과장은 또 개인 의견을 전제로 류 국장이 언론에 자신의 업무 범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어도 관련 발언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 앞서 류 국장은 지난 3일 관영 신화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어도가 중국 관할해역에 있고 감시선과 항공기를 통한 정기순찰 범위에 포함돼 있다고 밝히면서 이어도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했다.
- 한국 최남단인 마라도에서 149km 떨어져 있고 중국에서는 가장 가까운 거리가 247km인 이어도는 한국과 중국의 EEZ(해안선에서 370km 이내의 경제주권이 인정되는 수역)에 겹쳐 있음. 우리 정부는 이어도가 지리적으로 우리측에 더 근접해 있으므로 우리나라 EEZ에 속한다는 입장이지만 중국은 해안선 길이나 배후 인구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자국 수역으로 이어도 편입을 추진하고 있음. 한중 양국은 1996년부터 2008년 11월까지 14차례에 걸쳐 EEZ 경계 획정을 위한 국장급 회담을 했으며 이후 국장·과장급 협의를 계속하고 있으나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임.
- 한편 장 대사는 중국 내 탈북자 문제에 대한 김 차관보의 협조 요청에 대해 "한국의 입장을 잘 알고 있으며 이 문제는 조용히 처리하길 희망한



다"면서 "본부에 한국측 요청사항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장 대사의 '조용히 처리하길 희망한다'는 말에 대해 "한중 양국이 기존에 해온 조용한 외교 방식을 말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다. 한·일 관계

● 日 시마네 "독도 가까운 섬에 자위대 주둔 요청"(3/14)

- 일본 시마네(島根)현이 도쿄에서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주장하는 집회를 열고, 독도 주변 섬에 자위대 주둔을 요청하기로 해 일본 정부의 대응이 주목됨. 14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미조구치 젠베(溝口善兵衛) 시마네현 지사는 이날 일본 취재진과 정례 회견에서 "(중앙정부에) '오키(隱岐)섬에 자위대 주둔지를 설치하라고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 시마네현에 속한 오키섬은 일본에서는 독도와 가장 가깝지만, 157.5km 떨어져 있음. 울릉도와 독도간의 거리는 87.4km임. 일본은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라고 부르며 행정구역상 시마네현 오키섬에 속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미조구치 지사는 이날 회견에서 "5~6월 중앙 정부에 중점 요구 사항을 제시하기 전에 비공식적으로 (자위대 오키섬 주둔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교도통신은 지난 1월6일 오키섬 주변에서 북한의 표류 선박이 발견된 뒤 섬 주민들이 불안해한다는 점이 이 같은 요청의 배경이라고 전했다.
- 한편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시마네현 의회가 주도하는 단체인 '다케시마·북방영토 반환 요구 운동 시마네 현민회의'는 내달 11일 도쿄 헌정기념관에서 '다케시마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는 도쿄 집회를 개최할 계획'임. 도쿄에서 이 같은 집회가 열리기는 처음임. 헌정기념관은 도쿄의 국회의사당 바로 옆에 있는 만큼 수도 한복판에서 집회를 열겠다는 것임.
- 시마네 현민회의는 2006년부터 매년 2월22일 시마네 현민회관에서 개최한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일본 정부 관계자가 참석하지 않자 내달 도쿄 집회에 관방장관과 외무상 등의 출석을 요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4월 11일 집회는 '일본의 영토를 지키기 위해 행동하는 의원연맹'이 공동 주최함. 이 의원연맹에는 마쓰바라 진(松原仁) 국가공안위원장과 지난해 8월 한국의 독도 영유권 강화를 막겠다며 울릉도 시찰 소동을 벌인 신도 요시타카(新藤義孝) 자민당 의원 등이 속해 있음. 외교소식통은 "일본 중앙 정부 관계자가 참석할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말했다.

● 日 "구글 '독도는 울릉군' 수용 못해"(종합)(3/16)

- 일본 정부가 독도의 소재지를 '울릉군'이라고 기술한 구글의 지도 서비스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여러 차례 수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교도통신에 의하면 일본 정부는 16일 각의에서 독도의 소재지에 대해 인터넷 검색 대기업인 구글이 지도서비스 '구글맵'에 '울릉군'이라고 기술한 것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답변서를 결정했음.
- 일본 정부는 "(구글의 기술이) 열람자에게 다케시마(독도의 일본 표기)가



한국령이라는 오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입장에 비춰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음. 이는 자민당의 사토 마사히사(佐藤正久) 참의원 의원의 '질문'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 답변임. 교도통신은 "구글맵에서 일본명인 다케시마로는 검색이 되지 않지만 독도의 한글과 영어 표기로는 검색이 되며, 한국령으로 명기돼 있다"고 전했다.

- 한편 미국 뉴욕에 주재하는 일본 총영사관은 한국의 전자상거래 사이트인 G마켓이 지난 3월 1일 '3.1절'을 맞아 뉴욕타임스에 게재한 독도 광고와 관련 신문사 측에 항의했음. 일본 총영사관은 "뉴욕타임스 측이 향후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광고를 신지 않겠다고 답변했다"고 밝혔음. G마켓은 광고에서 독도가 동해에 자리잡고 있는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섬이라면서 올 여름 관광을 와서 즐겨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홍보했음.

라. 한·러 관계

● 제1차 한·러 국방전략대화 15일 개최(3/12)

- 한국과 러시아 간 제1차 국방전략대화가 오는 15일 러시아에서 열린다고 국방부가 12일 밝혔음. 회의에는 임관빈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아나톨리 안토노프 러시아 국제협력차관이 대표로 참석함. 이번 회의는 2007년 열린 국장급 국방정책 실무회의에서 양국이 고위급 대화채널 개설에 합의하고 2009년 양국 국방장관회담에서 이를 재확인한 이후 처음 열리는 것임.
- 양측은 한반도 주변의 지역 안보 정세를 평가하고 국방교류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할 예정임. 또 양국 간 전략대화 정례화 방안을 비롯해 러시아 사관생도 한국 위탁교육, 장교 방한교육 등 군인사교류 활성화 방안을 협의할 계획임. 1990년 이후 한국을 방문한 러시아 교육생은 한 명도 없었음. 이번 회의에서는 특히 군사기술 협력방안도 함께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음.
- 양국은 러시아에 빌려준 경협차관을 군사장비와 기술로 돌려받기로 하고 2007년 군사기술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음. 그러나 장비와 기술이전 목록을 두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해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여서 이번 회의에서 성과를 거둘지 주목됨. 현재 러시아에서 돌려받지 못한 경협차관 규모는 10억 달러임.
- 국방부 관계자는 "러시아 측에서 한반도 평화 및 안정적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우리측 역시 러시아의 건설적인 참여를 요청했다"면서 "회의를 통해 상호 안보 관심사 및 국제평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군사협력을 증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마. 미·중 관계

● 美-中 3차 아태사무협상 개최..北문제 집중논의(3/13)

-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와 추이텐카이(崔天凱)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12일(현지시간) 북한 문제를 비롯한 역내



- 문제를 논의했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음. 이날 협의는 메릴랜드주 소재 미 해군사관학교에서 열린 제3차 미·중 아시아태평양 사무협상(U.S.-China Asia-Pacific Consultations) 차원에서 이뤄졌음.
- 국무부는 "양측은 역내의 초미의 문제들을 논의했다"면서 "특히 북한과 버마(미얀마) 문제에 관심을 기울였다"고 전했다. 북한 문제와 관련된 구체적 대화 내용은 전해지지 않았지만 지난달 말 북미간에 합의된 북한 비핵화 조치와 대북 영양지원, 6자회담 재개 문제, 김정은 체제 등장 후 북한 내 동향 등이 집중 논의됐을 것으로 관측됨.
 - 국무부는 이번 아태 사무협상을 통해 양국이 건설적 협의를 했다면서 미국은 중국과 협력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할 것이라는 의지를 재확인하는 한편 중국이 세계 문제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환영했다고 밝혔음. 양국은 차기 미·중 전략경제대화과 전략안보대화의 의제, 인적 교류 방안 등도 논의했음. 국무부는 미국이 아시아 지역 역내 기구들의 역할이 강화되는데 지지를 보냈으며 중국과 함께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를 희망했다고 덧붙였다.
 - 이번 협의에 참석한 미국 대표단은 국무부와 국방부 및 국가안보 관련 당국자들로 구성됐음. 아태 사무협상은 2010년 5월 미·중 전략대화에서 합의된 것으로 그동안 두차례 개최됐음.

바. 미·일 관계

● "오키나와 美 해병 국외 이전 1천명 늘린다"(3/15)

- 미국과 일본 정부가 오키나와(沖縄)현에 주둔하는 미 해병의 국외 이전 규모를 1천 명 늘리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15일 보도했음. 이 신문에 의하면 미국과 일본은 지난 2006년 8천 명으로 합의했던 오키나와 주둔 미 해병의 국외 이전 규모를 9천 명으로 1천 명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이는 2006년 미일 합의 당시 1만 8천 명이었던 미 해병의 규모가 2만 1천 명으로 3천 명 증가한 데 따른 것임. 이라크 파병과 아프간 전쟁 등으로 미 해병대의 정원이 증가했음.
- 이에 따라 오키나와 주둔 미 해병대의 팜을 제외한 국외 이전 규모도 약 3천300명에서 4천~5천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팜으로 이전하기로 한 규모(약 4천700명)에는 변화가 없음. 미국은 일본에 오키나와 주둔 해병의 국외 이전비 부담을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일본은 부정적인 입장임. 미국은 해병의 재배치와 관련, 한 곳이 공격받을 경우 즉시 반격할 수 있도록 사령부와 전투부대, 항공부대, 후방 지원부대를 세트화해 분산 배치하는 방안을 제시했음.
- 미일 양국은 오는 23~24일 오키나와 주둔 해병 이전과 관련 샌프란시스코에서 심의관급 협의를 진행하며, 5월로 예정된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가 의제에 오를 것으로 보임.



● 美日, 오키나와 美기지 공동사용 검토(3/18)

- 미국과 일본이 주일 미군 오키나와(沖繩) 기지를 공동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지신문이 18일 보도했음. 이 신문에 의하면 미국과 일본 정부는 주일 미군 재편 계획의 수정과 함께 오키나와 미군 기지를 일본의 육상자위대와 공동 사용하는 방안의 검토에 착수했음. 오키나와 미 해병대의 주력 전투부대 사령부가 있는 '캠프 한센'에 육상자위대의 사령부 기능을 두고, 지휘 통신 기능의 통합 운용을 추진하는 방안임. 이는 오키나와 주둔 미 해병대의 국외 이전에 대비해 양국의 공조 강화로 역지력을 유지하기 위한 것임.
- 오키나와는 해양 활동을 강화하는 중국 해역에 가깝고, 일본으로서는 한반도 유사시를 상정할 경우 중요한 군사 거점임. 미국은 주일 미군 재편 계획에 따라 오키나와 주둔 해병대가 괌과 하와이 등으로 이전한 이후 유사시의 대응 능력이 저하하지 않도록 대비하는 의미가 있음. 미국과 일본은 지난 2006년 발표한 주일 미군 재편 로드맵에서 미군과 자위대의 통합 운용을 진전시키기로 합의한 바 있음.

사. 미·러 관계

● "美, 러 민주주의 위해 5천만弗 지원 추진"〈NYT〉(3/17)

-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러시아의 민주주의와 시민사회를 위해 5천만 달러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6일(현지시간) 보도했음. 이는 러시아 일각에서 미국이 내정간섭에 나선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에서 이뤄지는 것이어서 주목됨. 미국이 동유럽과 중앙아시아 등 과거 공산권 국가에서 시장경제의 정착을 위해 저금리로 예산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최근 수년간 의회에서 동결된 상태임.
- 이와 관련, 마이클 맥폴 러시아 주재 미국대사는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IIE)에서 러시아가 세계무역기구(WTO)에 공식 가입하기 앞서 냉전시대의 유물인 무역제재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며 의회가 해당 예산의 동결을 해제할 것을 촉구했음. 그는 "이 돈은 법의 지배와 신뢰받는 정부의 증진, 시민사회의 강화를 위한 노력의 연장선에서 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공산권 국가에 대한 미국의 예산 지원은 대부분의 경우 이윤을 냈고 일부는 재투자됐음. 최근 몇년간은 일부 수익금이 재무부에 귀속됐고 일부는 대외원조를 위한 재단에 다시 투자됐음.
- 미국은 지난해부터 러시아에 5천만달러를 다시 투자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나 러시아는 달갑지 않게 여김. 실제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총리였던 지난해 12월 미국이 러시아의 소요를 부추기려 시도하고 있다며 비난했음. 공개적으로 이 예산의 목적에 대한 음모론을 제기했던 것임.
- 러시아 야권에서도 미국의 최근 움직임에 대한 반응은 엇갈림. 친서방



- 성향의 정당인 '야블로코당'의 세르게이 미트로힌 당수는 "미국의 지원은 체제 전복을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오인될 여지가 있다"며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중들에게는 미국의 의도와 무관하게 음모론이 먹혀들 수 있으며 이 경우 시민사회에 득보다는 해가 된다는 인식임.
- 반면 모스크바-헬싱키그룹의 류드밀라 알렉세예바 소장은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임. 그는 지난 12일 인테르팍스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외국의 지원금에 기댈 수 밖에 없다"며 "러시아 정부는 독립적 인권단체에 자금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 기 타

● 美대북인권특사, 탈북자논의 유엔회의 참석(종합)(3/12)

-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오는 12~13일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인권이사회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10일(현지시간) 국무부가 밝혔다. 킹 특사는 유엔인권이사회의 북한문제 논의를 위한 19차 회의에 참석하며,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도 만나 북한 내 인권상황에 대해 논의할 예정임.
- 이번 유엔인권이사회에서는 탈북자 문제가 공론화될 전망이다. 킹 특사는 미국측 입장을 유엔인권이사회와 다루스만 보고관에게 전달할 것으로 보임.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지난 9일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탈북난민을 강제 복송해서는 안되며 난민 문제는 중국도 비준한 유엔 난민협약에 따라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음.
- 킹 특사는 이어 14~15일에는 이탈리아 로마로 이동해 세계식량기구(WFP)에 북한에 대한 영양지원 방안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라고 국무부는 밝혔다. 이 일정에는 대북 영양지원 문제를 쟁거왔던 존 브라우스미 국제개발처(USAID) 부국장도 함께할 예정임.
- 킹 특사의 WFP 협의 시기를 전후해 미국은 북한에 대한 영양지원의 구체적 방안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매월 2만씩 12개월간, 총 24만 규모의 영양보조식품을 북한에 지원한다는 방침임.
- 이에 앞서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북미 식량지원 회담에 참석했던 안명훈 북한 외무성 미국국 부국장은 10일 "모든 실무적 문제들에 (미국과) 합의했다"면서 미국의 식량지원을 즉시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대북영양지원은 당장 착수되더라도 수송기간 등을 감안할 때 앞으로 한 달은 걸려야 첫 지원분이 북한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 中, 첫 항모 올해 취역 공식화(3/12)

- 중국의 첫 항공모함인 '바라그호'의 올해 취역 계획이 공식화됐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해외판은 12일자 1면에서 쉬홍명(徐洪猛) 해군 부사령관의 말을 인용해 올해 항공모함의 취역 계획이 잡혀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앞서 법제만보(法制晚報) 등 일부 중국 언론이 전국인민대표



- 대회에 참석한 쉬 부사령관의 말을 인용하는 형식으로 항공모함 취역 계획을 보도하기도 했음.
- 그러나 일반 매체와는 위상이 전혀 다른 인민일보의 보도는 중국 안팎에 바랴그호 취역 계획을 공식화하는 의미가 있음. 북해함대 정치위원인 왕 덩핑(王登平) 중장(한국의 소장 해당)은 인민일보와 인터뷰에서 "우리나라는 300만km²의 영해에 단 한 척의 과학실험·연구용 항모(바랴그호)만을 갖고 있다"며 "우리의 방어적 국방 정책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왕 중장은 중국 국방력 강화를 바라보는 주변국의 우려에 대해 "천하에 아무런 일이 없는데 스스로 근심을 만든다"고 덧붙였다.
 - 중국은 1998년 우크라이나에서 2천만달러에 사들인 미완성 항모 바랴그호를 랴오닝성 다롄(大連) 조선소로 옮겨와 개조 작업을 진행해왔음. 바랴그호라는 이름은 중국 안팎에서 편의상 부르는 것으로 중국 해군은 정식 배치 전까지 함정에 이름을 붙이지 않음. 중국은 작년부터 최근까지 다롄 인근 해상에서 4차례에 걸쳐 바랴그호의 시험 운항을 했음. 중국은 동아시아의 첫 항공모함에 대한 우려의 시선을 의식해 바랴그호를 작전용이 아닌 '과학연구 및 훈련용'으로 규정함.
 - 증기터빈 엔진을 갖춘 바랴그호는 옛 소련 시절 건조한 쿠즈네초프급(6만7천500t) 항공모함으로 갑판 길이가 302m, 최대 속력이 29노트임. 약 2천명의 승조원을 태우고, 항공기 50여대를 탑재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음. 중국은 바랴그호에 접이식 날개를 가진 쟈(殲)-15(J-15) 전투기를 탑재할 것이 유력함. 중국은 이와 별도로 2015년까지 4만8천~6만4천t급의 핵 추진 항공모함 2척을 자체 건조해 추가 배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 <中, 탈북자·이어도에 다른 대응 눈길>(3/13)

- 최근 한·중 사이의 민감한 두 문제에 대한 중국의 대응이 확연하게 달라 보임. 탈북자 문제에 대해 전형적인 '저강도(Low-key)' 대응이라면 이어도 문제에 대해서는 관할권을 내세우며 정색하고 나선 데서 그런 기색이 역력함. 중국 당국은 탈북자 문제와 관련해선 수세적이고 난처한 표정으로 일관하면서 필요에 따라 반응하는 양상임. 그러지만 이어도 문제에는 원칙적이고 단호한 기색을 비추면서 철저히 계산된 대응을 한다는 지적이 나옴.
- 사실 탈북자 문제는 중국으로선 '난제'일 수밖에 없음. 특수관계인 북한을 의식해야 하고 인권 문제여서 자칫 잘못 처리하면 국제사회로부터 따가운 비난을 받아야 하기 때문임. 그렇지 않아도 인권 취약국으로 분류되는 중국에 탈북자 문제가 겹치면서 곤혹스런 표정이 비침.
- 중국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건 탈북자 문제의 국제 이슈화임. 한국 정부와 언론의 탈북자 복송 중단 요구에는 그런대로 맞설 수 있지만 이번에 미국 의회가 탈북자 문제를 빌미로 중국 정부의 인권 의식 부재를 문제로 삼고 유엔 인권이사회가 가세하자 중국이 힘들어하는 기색임. 중국은 일단 대내적으로는 '보도통제', 대외적으로는 저강도 대응으로 일관



- 하는 모양새임.
- 연일 한국에서 탈북자 북송 반대 시위가 들끓고 한국 국회의원들이 제네바 유엔 인권이사회를 방문해 중국에 항의하지만, 중국 언론 매체는 이를 거의 보도하지 않고 있음. 일종의 '무시 전략'임. 국제사회에는 탈북자가 난민이 아닌 경제적 이유로 중국에 들어온 불법 월경자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중국은 그동안 국내법과 국제법,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불법 월경 조선인 문제를 처리해왔다고 정당화하고 있음. 그럼에도, 국제 여론 자극을 우려한 탓인지 '공세'를 취하지는 않는 점이 두드러짐.
 - 마르주키 다르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현지시간으로 12일 제네바에서 탈북자 강제송환을 우려한다고 중국을 직접 겨냥한 데 대해서도 현장에서 중국 대표단은 그와 관련해 '불만'을 표시하는 수준에서 그쳤음. 이와는 달리 이어도 문제에 대해선 중국의 입장이 거침없어 보임. 류웨이민(劉爲民) 외교부 대변인이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는 (이어도가 아닌) 쑤옌자오(蘇巖礁)라고 부른다"며 "해당 해역은 중국과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중첩지역인 만큼 귀속문제는 쌍방이 담판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정리해 말했음.
 - 통상 한중 간에 마찰을 일으키는 사안에 대해서는 중국의 신문·방송 매체는 물론 인터넷 포털 사이트들이 대대적으로 보도하는 데 비해 이어도 논란이 크게 보도되지 않은 점도 눈여겨볼 대목임. 류츠구이(劉賜貴) 중국 국가해양국장의 '도발적인' 이어도 관할권 발언에 대해 한국 정부가 장신썬(張愼<金 3개>森) 주한 중국대사까지 불러 따져 물었지만 이런 내용은 중국 매체에 거의 보도되지 않았음.
 - 이를 두고 중국 정부가 이어도 대응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옴. 사실 중국 정부가 1990년대부터 이어도에 대한 관할권을 간헐적으로 주장해왔다는 점에 비춰보면 류츠구이 국장의 관할권 발언은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음. 그러나 발언 시점과 수위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 보임.
 - 류츠구이 국장은 지난 3일 관영 신화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어도가 중국 관할 해역에 있으며 감시선과 항공기를 통한 정기순찰 범위에 포함돼 있다고 언급했음. 이전과 달리 이어도를 정기순찰 범위라고 규정해 한국을 자극한 점이 눈에 띈. 해당 발언이 나온 시기는 탈북자 문제를 미국 의회가 본격적으로 다루겠다는 의지를 비치고 유엔 인권이사회까지 이 문제가 번지려는 때임. 이런 정황 탓에 일각에서는 류츠구이 국장의 발언은 중국의 국면전환 카드라는 해석을 내놓음. 류 국장의 발언은 이어도 논란을 영토문제로 인식하는 한국민의 정서를 겨냥해 한중 마찰의 포인트를 탈북자에서 이어도 문제로 옮기려는 의도된 도발이 아니냐는 분석임.
 - 사실 이어도 다툼은 중국으로선 잃을 게 없는 게임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어도가 지리적으로 한국 쪽에 가까워서 앞으로 EEZ 협상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중국이 이를 확보하기는 쉽지 않다는 점에서 분쟁화할수록 유리하기 때문임. 실제 중국 당국은 갈수록 이어도에 대한 대응수위를 높



이고 있음. 아울러 이어도 문제는 현재 한국 내에서 논란을 빚는 제주 해군기지와 연계된 안보 사안으로 휘발성이 크다는 점을 잘 아는 중국으로선 류즈구이 국장의 발언을 통해 한국민의 관심을 탈북자에서 이어도로 옮기는 '성과'를 거뒀다는 분석도 일각에서 나옴.

● 中, 유엔 인권이사회서 탈북자 논의 불만 표시(3/13)

- 중국이 유엔 인권이사회(UNHRC)에서 탈북자 문제가 논의된 것에 대해 공식적인 불만을 표출했음. 중국 대표단은 12일(현지시간) 열린 UNHRC 회의에서 한국과 유럽연합(EU) 등이 탈북자 문제를 제기한 것에 불만과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고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13일 전했다.
- 중국 대표단은 우선 "이런 조선(북한)인들은 난민이 아니라 경제적 이유로 중국에 들어온 불법 월경자"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음. 이어 중국 대표단은 "이 같은 행위는 중국의 법률을 어긴 것"이라며 "어떻게 처리할지는 완전히 중국 주권에 속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대표단은 "중국은 줄곧 국내법과 국제법,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불법 월경 조선인 문제를 신중히 처리해왔다"며 "이는 국제관례에 부합하고 한반도 정세의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자국의 조치가 국제적 통행 질서 관리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탈북자 문제를 국제화, 정치화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음.
- 인민일보는 UNHRC 회의에서 한국, EU, 미국, 캐나다, 프랑스, 영국, 스위스 대표단이 탈북자 문제를 제기하면서 '유관 국가(중국)'가 탈북자를 강제 복송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보도했음.

● 대만, 日 대지진 피해지역 여행금지 해제(3/13)

- 대만 당국이 동일본 대지진 1년을 맞아 일본 후쿠시마(福島) 지역에 대한 여행금지 조치를 해제했음. 대만 외교부는 일본의 관광산업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다만 사고의 여파가 남아 있는 후쿠시마 제1원전 주변 반경 30km 지역에 대해선 여행정보를 유지했음.
- 앞서 대만은 지난해 동일본 대지진 당시 66억 대만달러(약 2천600억원)의 성금을 모아 일본에 전달했음. 이는 세계 각국의 성금 지원액 중 가장 큰 규모임. 또 12일 대만주재 일본 대사관 격인 일본교류협회 타이베이 사무소에서 열린 동일본 대지진 희생자 추도행사에는 마잉주(馬英九) 대만 총통을 비롯해 우둔이(吳敦義) 부총통 당선자, 양진텐(楊進添) 외교부장 등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관심을 나타냈음. 마 총통은 "1999년 9·21 대만 지진과 2009년 모라곶 태풍 피해 당시 일본인들의 재해 복구 지원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면서 지속적인 재해 공조 및 협력 의지를 밝혔음.
- 일본 측은 이날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의 감사 서한을 마 총통에게 전달했음.



● 日대지진 추도식서 '대만을 민간단체 취급' 논란(3/14)

- 일본이 동일본대지진 1년 추도식 당시 대만 대표를 각국 외교 사절과 구분해 민간단체 관계자로 취급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산케이신문이 14일 보도했음. 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 11일 도쿄 국립극장에서 열린 대지진 1년 추도식에서 대만 측 대표인 뤼쑤찬(羅坤燦) 주일 타이베이 경제문화대표처 부대표를 외교사절이 앉는 1층 내빈석이 아니라 2층 일반석에 앉게 하고, 각국의 이름을 부르며 현화하게 하는 '지명 현화' 순서에서도 제외했음.
- 외무성은 일본에 공관을 둔 150개국 대사와 중국 등지에 있는 공관의 일본 담당자, 35개 국제기관 관계자를 초청했고, 일본이 국가로 인정하지 않은 팔레스타인 대표 등 외교 사절 약 160명이 추도식에 참석했음. 그런데도 유독 대만은 민간단체로 취급하자 자민당과 산케이신문이 반발했음.
-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자민당 의원은 12일 국회 질의에서 "대지진 당시 가장 먼저 구원의 손을 내밀었고, 의연금도 가장 많이 낸 대만에 대해 어째서 이같은 실례를 한 것이냐"고 따져 물었음. 산케이신문도 14일자 조간 1면 머리기사로 대만이 대지진 당시 세계 최고 규모인 의연금 200억엔을 내고 구조대 28명을 파견했다는 사실을 강조한 뒤 2면에는 '일본인으로서 부끄럽다'는 제목의 사실을 신는 등 정부를 맹렬히 비판했음.
- 이에 대해 후지무라 오사무(藤村修) 관방장관이 "대만에 관한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입장은 1972년 일중(중일)공동성명 대로다"라고 말했음. 공동성명에 '대만이 중국의 일부라는 중국 정부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한다'고 표현했으니 그대로 따랐다는 설명임. 하지만 반발이 커지자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는 "세심하게 신경 쓰지 못한 점을 깊이 반성한다"고 한발 물러섰음.
- 한편 북한도 지난해 대지진 직후 일본적십자사에 의연금 10만 달러를 보냈지만, 일본에서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조선총련 관계자는 14일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우리는 초청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음.

● 中 상무부 "환경보호 위해 희토류 수출 제한"(3/14)

- 중국 상무부가 14일 희토류(稀土類)의 수출 제한은 "자원과 환경보호, 지속 가능한 발전 차원에서 단행된 조치"라고 강조했다. 상무부는 이날 웹사이트에 올린 성명에서 이같이 밝혔음. 상무부는 미국, 유럽연합(EU), 일본이 공동으로 세계무역기구(WTO)에 희토류 수출제한 중재요청을 했고 그와 관련해 정식으로 통보를 받았다고 확인했음. 상무부는 아울러 중국은 그동안 관련국들과 지속적으로 희토류 수출과 관련한 논의를 해왔다면서 WTO 규정에 따라 이번 중재요청에 대한 논의도 진행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앞서 류웨이민(劉爲民) 외교부 대변인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의 희토류 매장량은 전 세계의 36.4%에 불과하면서도 수출 점유율은 90%



이상인데 이런 상황은 더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면서 "다른 희토류 매장국들도 개발노력을 기울여 중국과 함께 희토류 공급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 **日, 자원외교 · 中 의식 재외 대사관 대폭 확충(3/18)**

- 일본 정부가 재외 대사관 수를 대폭 확충하기로 했음. 18일 아사히신문에 의하면 일본의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郎) 외무상은 재외 대사관 수를 현재의 134곳에서 약 150곳으로 늘리겠다고 밝혔음. 아프리카와 중남미 등 신흥국을 중심으로 대사관을 신설해 자원외교 등을 강화하자는 취지임. 겐바 외무상은 17일 나고야시의 한 집회에 참석해 "일본이 국가로 승인한 나라는 194개국이지만 대외관은 134개소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음.
- 외무성은 각국의 수도 밖에 있는 총영사관 수를 줄이고 수도에 대사관이 없는 국가를 중심으로 대사관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음. 일본이 대사관을 늘리려는 것은 아프리카 등 자원국에 진출해 존재감을 높이고 있는 중국을 의식한 것으로 보임. 유엔 개혁 등의 과정에서 일본의 발언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해석됨.

● **국제관계연구센터 제공**